

1호 안건

제1차 청년정책 청년정책 기본계획('21 ~ '25)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중앙행정기관]

2021. 3. 30.

관계기관 합동

☐☐ 목 차 ☐☐

I. 수립배경 및 주요경과	3
II. 지난 4년간 청년정책 추진현황	6
1. 지난 4년간 청년대책 주요내용	6
2. 청년정책 추진 기반 마련	8
3. 청년정책 추진여건 평가	11
III. 2021년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	12
1.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 개요	13
2. 분야별 주요 내용	15
3. 향후계획	35
[참고1] '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주요사업 추진 일정표	36
[참고2] 법률 및 하위법령 등 개정 필요사항 및 계획	38

I. 수립배경 및 주요경과

1 수립 배경

- 청년의 행복한 삶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청년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년)」 수립(‘20.12.23)
 - 청년이 원하는 삶을 주도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대 분야 20개 중점과제 및 270개 세부과제 마련
- 발표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수립 추진

2 법적 근거

- 「청년기본법」 제8조 및 제9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부칙 제3조

【청년기본법】

제8조(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무총리는 5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국무총리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침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해야 한다.

부칙 제3조(시행계획 수립 지침의 통보에 관한 특례) 2021년도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지침은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3

수립 주체

- 「청년기본법(제9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주체는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 중앙행정기관 :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관련 32개 기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달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 지방자치단체 : 17개 시·도지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및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4

수립 경과 : 민-관, 중앙-지자체 협력, 청년과의 소통

-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년)」 수립(청년정책조정위원회, ‘20.12월)

- 중앙-지방,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안) 마련

- (중앙-지방 협업)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중앙부처 및 지자체 협력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시행계획(안) 마련 및 제출(‘21.1.31.)

* 2021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시행계획 수립지침 통보 (‘20.12월말)

* 시행계획 작성 관련 중앙-지자체 온라인 설명회(‘21.1월초)

- 부처협의, 지자체 협업(부단체장 간담회, 실무자 회의)

- (민·관 협력)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본위원회 민간위원 중심으로 시행계획(안) 검토 및 조정

- (청년 소통) 청년과의 소통, 현장방문 등을 통한 시행계획 보완·검토

- 시행계획(안)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 심의·의결(‘21.3.23)

- 시행계획(안)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의·의결(‘21.3.30)

비전

원하는 삶을 사는 청년, 청년이 만들어 가는 미래

방향

청년의 삶을 청년이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삶의 공간 △안정적 토대를
 다양한 청년에게 권리로 보장

3대
원칙

참여와 주도 **격차 해소** **지속가능성**

5대
정책
방향
및
중점
과제

 일자리 청년의 일할 권리를 보장합니다 ①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역량 강화 ② 청년 창업 활성화 및 내실화 ③ 청년의 일터 안전망 강화 ④ 공정채용 기반 구축·직장 문화 개선	 주거 청년의 주거부담이 줄어듭니다 ① 청년 주택 공급 확대 ② 청년의 전월세 비용 경감 ③ 고시원·반지하 거주 취약청년 집중 지원 ④ 청년 친화형 주거모델 보급
 교육 청년이 스스로의 삶을 그려갑니다 ① 고른 교육기회 보장 ② 청년의 미래역량 강화 ③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④ 온택트 교육기반 구축	 복지·문화 청년의 생활이 나아집니다 ① 사회출발자산 형성 및 재기 지원 ② 청년건강 증진 ③ 청년 취약계층 지원 확대 ④ 문화가 있는 청년의 삶
 참여·권리 청년의 삶을 청년이 직접 결정합니다 ① 정책결정 과정에 청년 주도성 확대 ③ 청년친화적 정책 전달체계 확립 ② 청년정책 추진기반 마련 및 내실화 ④ 청년 권익보호 및 청년교류 활성화	

Ⅱ. 지난 4년간 청년정책 추진 현황

- ◇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21~'25년) 등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참여 등 청년 삶 전반으로 청년정책 확대 및 체계화
- ◇ 청년기본법 제정,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출범, 정부위원회 청년위촉 의무화 등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구축

1 지난 4년간 청년대책 주요내용

① 「청년 일자리 대책」('18.3월)

- 중소기업 취업시 실질소득 여건 개선, 기업 고용인센티브 강화, 창업 활성화, 先취업-後학습 촉진 등 과감한 정책 추진

- (취업) 기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年 900만원), 청년고용증대세제, R&D제도개선 패키지 등
청년: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3천만원 자산형성), 중소기업자 소득세 감면(5년간 90%) 등
- (창업) 창업前: 생활혁신형 창업 성공불용자, 기술혁신형 창업 오픈 바우처 등
창업後: 사업지원 바우처(회계·세무·노무·특허 등) 신설, post-TIPS 등
- (역량개발) 취업前: 청년구직활동지원금(月 50만원), 4차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 등
취업後: 후진학자 전담과정 운영대학 지원, 희망사다리Ⅲ(후진학) 장학금 신설

②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18.7월)

- 청년 맞춤형 임대주택 및 기숙사형 청년주택 공급,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희망상가 공급, 청년 주거금융 지원상품 출시 등

- (주택공급) 청년맞춤형 임대주택 27만실(+2만) 공급, 기숙사형 청년주택 6만명(+1만) 공급
- (희망상가 공급) 청년 및 영세 소상공인 대상 희망상가 공급
- (금융지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출시,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출시, 청년버팀목 전세대출 대상주택 및 대출한도 확대, 증기청년 임차보증금 저리융자 실시 등

③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19.7월)

-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확대 및 주거·교육·취약청년 지원 등 생활밀착 과제 추진

- (일자리) 新직업 Making Lab, 청년전용창업 융자 확대(+300억원), 중소기업 클린업 등
- (주거) 공공청사복합개발, 역세권 세어하우스, 전세임대 우대금리(Δ 0.2~0.5%p) 신설 등
- (교육) 후학습 장학금 확대(~중견→대기업 포함), 고교취업연계 장려금 확대(+4.5천명) 등
- (취약청년) 청년저축계좌 신설(본인 10만원 적립→30만원 매칭), 햇살론 Youth 재출시 등

4 「2020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20.5월)

- 직업계고 학생들이 먼저 취업하고 후학습하면서 기술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 현장실습, 선취업 후학습 등 단계적 지원 강화

- (직업교육) 학과개편지원(매년100개 이상), 마이스터고교 학점제 우선 도입 등
-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사 지정운영, 실습참여지원금 지원, 직업계고별 전담노무사 지정운영
- (선취업지원) 취업지원관 배치 확대, 취업전담교사 도입, 중앙취업지원센터 도입
- (후학습지원) 취업장려금 지원(400만원), 후학습자 장학금 확대(9천명→11천명) 등

5 「제1, 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20.3월, 9월)

- 청년과의 온-오프라인 소통을 바탕으로 일자리·주거·교육·생활·참여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입체적·포괄적 청년지원정책 마련

- (일자리) 청년내일채움공제 재가입제한 완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확대(20→29만명) 등
- (주거) 청년맞춤형 전월세 대출공급 확대(1.1→4.1조원), 별도가구 청년가구 주거급여 분리지급
- (교육)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Delta 0.15\%$), 희망사다리장학금 확대(+23천명), 현장실습여건 개선 등
- (생활지원) 병역미필자 단수여권제도 폐지, 청년마을 확대, 우울증검사 개선 등
- (참여·권리) 정부위원회 청년참여 확대, 공공기관 채용 필기시험 성적공개 등

6 코로나19로 인한 청년층 고용충격 대응 지원(‘20년 2월·3월·4월·9월)

- 코로나19로 인해 취업이 어려워진 청년구직자, 고용안정성이 낮은 비정규직 등의 일자리 여건 개선 및 소득지원 강화

- (구직촉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확대, 특별구직지원금 신규 지원 등
- (훈련·취업알선)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지원 확대 등
- (채용촉진)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 채용기업 인건비 지원 등
- (직접일자리) 청년층 경력개발에 도움이 되는 직접일자리 약 10만개 지원 등
- (생계안정) 구직급여 추가 확충, 고용 취약계층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등
- (고용안정)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고용보험 보장성 강화,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등

7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년) 수립(‘20.12월)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정부가 협력하여, 청년정책 비전·방향, 5개 분야 20대 중점과제를 포함하는 최초의 5개년 계획 마련

- (일자리) ‘25년까지 128만명 구직자 지원, 고용보험 확대, 청년창업 전주기 지원
- (주거) 청년주택 27.3만호 공급, 최저주거기준 미달 청년주거 10% 감축
43.5만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 청년친화 도심융합특구 조성 등
- (교육) 저소득층 대학등록금 부담 제로화, 미래신산업 핵심인재 10만명 양성 등
- (복지·문화) 희망저축계좌 통합 및 10만명 자산형성 지원, 마음건강 바우처 지원
문화누리카드 확대 등
- (참여·권리) 청년참여 정부위원회 지정, 청년마당 전국 확대, 온라인 청년하나로 구축 등

2

청년정책 추진 기반 마련

1. 청년정책 관련 법적 기반 마련

- 「청년기본법」 제정('20.2월) 및 시행('20.8)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또한, 각 중앙행정기관에서도 기관별 주요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법적 근거 마련 위한 다양한 노력 경주

청년정책 관련 주요 법령

부처	관련 법령	주요내용
국조실	「청년기본법」	▶ 청년 연령(19~34세) 국가지자체 책무, 청년의 권리책임 등
고용부	「구직자취업촉진법」	▶ 청년구직촉진수당지급 등
고용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 공공기관 청년의무고용제 등
중기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원 등
중기부	「중소기업창업법」	▶ 창업사관학교 운영, 메이커 스페이스 지원 등
과기부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 SW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 근거 마련
국방부	「병역법」	▶ 병사 민간 병원 진료비 지원근거 마련
국토부	「공공주택특별법」	▶ 공공주택 지구 지정·조성 및 공급·관리
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법」	▶ 금융교육 활성화 관련 법적 근거 마련
농식품부	「후계청년농어업인법」	▶ 청년 농업인 기준, 우대, 고용지원 규정 등 마련
복지부	「건강검진기본법」	▶ 국가건강검진대상에 청년 포함, 우울증 검사주기 개선
외교부	「여권법」	▶ 25세 이상 병역미필 청년 단수여권제도 폐지

- 旣 제·개정된 법령 외에도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동 시행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관련 법령 제·개정 추진 예정

2.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실행 기반 구축

- 청년정책 총괄 조직으로 국무조정실 내 청년정책추진단 신설('19.7)
 - 청년정책실 신설 추진('21.4, 직제 개정 예정)
 - * BH 청년소통정책관 신설('19.6) → BH 청년비서관실 신설('20.7)
- 범정부 청년정책 컨트롤타워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총리) 출범('20.9월)
 - * 당연직 20명(위원장 국무총리 포함) + 민간위원 20명(부위원장 이승윤 / 청년위원 12명)
 - 청년정책 이슈에 수시 대응하기 위해, 부처별로 청년정책 조정을 위한 다양한 기제(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고용부), 청년특별위원회(금융위)) 활용
-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청년정책을 총괄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책임관' 지정·운영('19.9월~)
 - * 국조실, 기재부, 교육부, 과기부, 고용부, 총 44개 부처 청년정책 담당 국장급

3.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위촉 등 청년참여 기반

- 청년기본법의 시행으로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정부위원회에 청년의 참여가 의무화됨에 따라,
 -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운영중인 주요 정부위원회에 청년위원 참여 대폭 확대 (50% 이상 2개, 30% 이상 2개, 20% 이상 7개 등 총 135개 위원회)

청년참여 정부위원회 현황(위촉직 20% 이상)

소관기관	위원회(청년위원 목표/위촉직/전체위원)	청년위촉비율
국무총리	청년정책조정위원회(12명/20명/40명)	50% 이상
고용부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5명/10명/22명)	
교육부	등록금심의위원회(각 대학별 구성, 3인 이상/7인 이상/7인 이상)	30% 이상
국방부	군인복지위원회(1명/3명/8명)	
대통령	미세먼지문제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5명/22명/43명)	20% 이상
국무총리	양성평등위원회(2명/10명/25명)	
국무총리	국가보훈위원회(4명/20명/35명)	
교육부	학자금지원제도심의위원회(1명/5명/13명)	
국방부	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1명/5명/12명)	
복지부	자살예방정책위원회(2명/10명/22명)	
중기부	창업지원정책협의회(2명/6명/16명)	

- 또한, '좋은 청년주택 만들기 특별회의^{국토부}', '금융발전심의회 청년특별위원회^{금융위}' 등 다양한 형태의 위원회에 청년참여 확대 추진
 - 정부혁신평가시 정부위원회 청년참여 확대성적을 반영하는^{행안부} 등 정책결정 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화 진전

4. 청년 정책 관련 주요 홍보 기제

- 부처별로 대표적 정부정책을 선별, 정부가 보유한 홍보 매체(KTV, 정책주간지 등)를 통한 적극적 홍보 추진
 - 특히, 코로나 19로 비대면 소통 홍보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SNS 등 다양한 청년 친화적 매체를 활용한 쌍방향 정책 소통 등 청년정책의 적극적 홍보 추진
- 청년정책 박람회 개최, 기관별 청년 서포터즈 운영, 청년 기자단 운영 등 청년이 직접 참여*하는 정책 홍보 추진
 - 기재부·여가부·법무부 등 33개 부처에서 73개 청년참여 프로그램 사업*을 운영하여, 18,474+a명 청년 참여 통한 홍보
 - * 예 : EDCF 캠프(기재부), 대학생 법무보호위원 전국연합회(법무부), 청년 성평등 문화추진단(여가부)

<참고> 도입시기별 청년정책 정리

◇ '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사업 308개를 도입시기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17.5월 이후 도입된 청년정책은 185개로 확인

- 주거, 복지·문화 분야 등 신규과제 발굴을 통하여 과거 일자리 중심에서 청년의 삶 전반에 걸친 종합적·포괄적 정책으로 확대

도입시기별 청년정책 과제수(개) 및 예산(억원)

분야	'17.5월 이전 도입		'17.5월 이후 도입		합 계	
	과제수	청년예산*	과제수	청년예산	과제수	청년예산
일 자리	42	35,034	73	47,164	115	82,198
주 거	6	11,967	18	75,072	24	87,039
교 육	48	49,997	40	6,796	88	56,793
복지·문화	15	4,295	35	7,328	50	11,623
참여·권리	12	511	19	174	31	685
합 계	123	101,804	185	136,534	308	238,338
	(* 비예산 과제 11개)		(* 비예산 과제 34개)		(* 비예산 과제 45개)	

* '17.5월 이전 도입사업의 예산액은 '21년도 정부예산 기준액으로 산정
청년예산은 국비에 청년지원 비율을 고려해서 산출한 추정치

- 특히, 국민취업지원제도, 미혼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등 43개 청년 정책이 '21년에 신규도입

'17.5월 이후 신규 도입된 청년정책 주요사업

분 야	과제명(소관부처)
일 자리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부),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고용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중기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행안부), K-디지털 트레이닝 K-디지털 크레딧(고용부), 특고 직종 고용보험 확대(고용부) 글로벌창업사관학교(중기부), 구직단념청년 발굴 및 고용서비스 연계(고용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권익위)
주 거	역세권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국토부), 좋은 청년주택 시범설치(국토부), 거주 취약자 이주패키지 지원(국토부), 미혼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국토부)
교 육	저소득청년·다자녀가구 등록금 부담 제로화(교육부), 대학입학금 부담 완화 (교육부), 마이스터대 도입(교육부), 평생교육바우처 지원(교육부), 대학생 마음건강 지원방안 추진(교육부), 이노베이션 아카데미(과기부)
복지·문화	20~30대 청년세대 국가건강검진 확대(복지부), 마음건강바우처(복지부), 청년저축계좌(복지부), 청년·대학생 햇살론 확대(금융위), 빈곤청년 근로 인센티브 확대(복지부), 보호종료야동 자립수당 지원(복지부), 청년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지원(여가부), 청년 등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문체부)
참여·권리	대통령·정부위원회 청년참여 확대(국조실), 대학인권센터 설치 강화(교육부)

* 파란색 표기는 '21년 신규도입되는 정책

- 청년정책 확대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 증대, 경기 후행적 특성 등으로 청년 고용여건의 개선은 더딜 우려
 - 2월 졸업자 노동시장 진입 규모*(고졸 이상 65만명) 및 '20년 체감 실업자(확장실업자 121만명) 고려 시 단기간내 회복은 어려운 상황
 - *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자(상급학교 진학자 등 제외, '19년 기준, 교육부)
 - 고용·소득여건 악화, 주거비 부담¹⁾ 등으로 부채 증가²⁾, 우울증 및 자살 등 청년층 마음건강에 대한 우려도 지속
 - * 1) 청년 1인 가구 추이(가구): ('10) 75만 → ('14) 117만 → ('19) 178만 (국토연구원 '19)
 - 2) 부채 보유가구 비율(%): <20대> ('17)47.7→('19)72.1 <30대> ('17)57→ ('19)75.6
- 한편,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청년(19~34세) 비중*이 감소하여 타연령에 비해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기 어려워질 가능성
 - * 19~34세 비중(장래인구추계, '17, % 중위기준): ('21) 20.8 ('22) 20.5 ('23) 20.2 ('24) 19.8 ('25) 19.3
- 동시에 비대면·디지털 전환 등 경제사회구조 변화는 가속화
 - 신산업 인력 및 그린뉴딜·탄소중립 이행 등을 위한 인력 수요 증대
 - 고용구조 변화로 특고, 플랫폼 종사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취업자에 대한 사회 안전망 강화 필요성 대두

◇ 코로나 19 등 청년이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는 동시에 구조적 변화에 선제적 대응 필요

- "'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을 통하여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년~'25년)」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 청년의 정책 주도성 강화 기조하에서,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청년 체감도 제고 노력 병행

Ⅲ. 2021년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중앙부처·지자체) 총괄 >

-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으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70개 과제)에 따른 청년정책이 확대·구체화되고, 중앙·지방 상호협력·보완 강화

⇒ 정책 사각지대 감소 + 지역 청년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

구분	중앙정부	광역시·도	계
과제(개)	308	1,258	정책 308 사업 1,258
예산(조원)	23.8	2.2	26.0

- '21년 중앙부처 시행계획 주요 추진 목표

분야	'21~'25년 5년간 목표 (기본계획)	'21년 목표 (시행계획)
일자리	·청년구직자 128만명+0 지원 * 코로나19 극복 55.5만명 지원 ·일하는 모든 청년 고용보험 가입 ·청년창업 전주기 지원체계 강화	·청년구직자 101.8만명+0 지원 *코로나19 극복 66.5만명 지원(+11만명 추가) ·특고 직종 고용보험 확대 적용 및 추가 발굴 ·청년 종사 업종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온·오프라인 청년창업 전주기 패키지 지원
주거	·청년주택 27.3만호 공급 ·3.5만명 청년가구 주거급여 분리 지급 ·청년 40만명 전·월세 자금 대출 지원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10% 감축	·청년주택 5.4만호, 기숙사 0.6만실 공급 ·3.1만명 청년가구 주거급여 분리 지급 ·청년 8만명+0 전·월세자금 대출 지원 ·초장기 정책모기지 도입 등 내집마련 지원 ·선도지자체 선정, 주거상향 지원사업 본격화
교육	·저소득층 대학등록금 부담 제로화 ·신산업 핵심인재 10만명 양성 ·온택트 평생교육 체계 구축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강화 ·대학입학금 단계적 폐지 ·혁신공유대학 48교 지정, 프로그램 운영 ·K-MOOC 청년 참여 인센티브 강화
복지	·희망저축계좌 10만명 지원 ·마음건강 바우처 지원	·청년저축계좌 등 1.8만명 지원, 자산형성지원 통합 및 확대방안 수립(21.하반) ·마음건강 바우처(월20만원) 최초 시행
참여	·청년참여 정부위원회 30% 지정, 청년참여위원회 청년위원 20% 위촉 ·온라인 청년하나로 구축 ·청년마당 조성	·청년참여 위원회 비율 확대('20 13.9→'21 17.1%) ·청년위원회 추가 확대 방안 마련('21.7월) ·온·오프라인 통합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 방안 수립('21.하반) ·청년마당 표준 운영계획 수립('21.하반)

1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 개요

□ (총괄) 32개 중앙행정기관의 '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과제수는 총 308개*, 예산은 약 23.8조원(전년 대비 19.6% ↑)

*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세부과제 270개 + 청년정책과제 추가

□ (분야별) 과제수기준 일자리분야, 예산기준 주거분야 비중이 가장 높음

○ (과제수) 일자리(37.3%), 교육(28.6%), 복지·문화(16.2%), 참여·권리(10.1%), 주거(7.8%) 順

○ (예 산) 주거(36.5%), 일자리(34.5%), 교육(23.8%), 복지·문화(4.9%), 참여·권리(0.3%) 順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분야별 과제수(개) 및 청년예산(억원)

분 야	과제수	예 산 ¹⁾		
		'20년 ²⁾	'21년	(비중,%)
합 계	308	199,357	238,338	
I. 일자리	115	62,855	82,197	34.5
1.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역량강화	57	45,991	63,490	
2. 청년 창업 활성화 및 내실화	40	10,071	12,052	
3. 일터 안전망 강화	9	23	26	
4. 공정채용 기반 구축·직장문화개선	9	6,771	6,630	
II. 주 거	24	70,974	87,039	36.5
1. 청년주택 공급 확대	8	40,852	50,970	
2. 청년 전·월세 비용 경감	6	27,072	28,929	
3. 주거취약 청년 집중 지원	4	2,850	7,125	
4. 청년친화형 주거모델 보급	6	200	15	
III. 교 육	88	53,306	56,793	23.8
1. 고른 교육기회 보장	15	43,145	43,907	
2. 청년의 미래역량 강화	39	4,716	6,041	
3.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30	5,160	6,422	
4. 온택트 교육기반 구축	4	285	423	
IV. 복지·문화	50	11,238	11,623	4.9
1. 사회출발 자산 형성 및 재기 지원	4	599	752	
2. 청년 건강 증진	9	5,939	6,057	
3. 취약계층 지원 확대	11	282	360	
4. 문화가 있는 청년의 삶 지원	26	4,418	4,454	
V. 참여·권리	31	984	685	0.3
1. 정책결정과정에 청년 주도성 확대	6	11	11	
2. 청년정책 추진기반 마련 및 내실화	4	0	3	
3. 청년 친화적 정책 전달체계 확립	8	102	160	
4. 청년 권익보호 및 청년교류 활성화	13	871	511	

1) 추경을 반영한 최종예산 기준

2) '21년 정책과제를 기준으로 '20년 예산 산출

□ 중앙행정기관별 시행계획 과제수 및 예산

- (과제수) 교육부(37개), 문체부(37개), 고용부(36개), 국토부(31개), 과기부(21개) 順
- (예산) 국토부(8.5조), 고용부(6.1조), 교육부(5.0조), 문체부(0.9조), 중기부(0.8조) 順

중앙행정기관별 시행계획 과제수(개) 및 청년예산(억원)

기관명 ¹⁾	과제수						청년예산(추경 후 기준)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20년 ²⁾	'21년	
교육부	37	2	1	30	1	3	46,444	50,291
문화체육관광부	37	5	0	3	28	1	7,496	9,041
고용노동부	36	28	0	5	0	3	49,159	61,100
국토교통부	31	5	21	3	1	1	68,203	84,8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1	4	0	17	0	0	4,132	4,734
중소벤처기업부	20	15	0	3	0	1	6,577	7,725
농림축산식품부	18	12	1	4	0	1	6,050	7,545
여성가족부	16	7	0	1	6	2	170	303
보건복지부	10	0	0	0	10	0	3,578	4,674
해양수산부	8	4	0	4	0	0	39	79
국무조정실	7	0	0	0	0	7	10	14
산업통상자원부	6	4	0	2	0	0	2,389	2,561
행정안전부	6	3	0	0	0	3	3,353	3,579
금융위원회	5	1	1	0	2	1	300	350
산림청	5	3	0	2	0	0	20	80
특허청	5	2	0	3	0	0	67	81
환경부	5	2	0	2	0	1	199	407
국가보훈처	4	2	0	0	0	2	67	78
농촌진흥청	4	2	0	2	0	0	89	46
병무청	4	2	0	1	1	0	7	26
국방부	3	1	0	1	1	0	206	371
기획재정부	3	3	0	0	0	0	15	16
식품의약품안전처	3	0	0	3	0	0	8	19
국민권익위원회	2	1	0	0	0	1	2	2
문화재청	2	1	0	0	0	1	43	25
방송통신위원회	2	0	0	2	0	0	3	3
인사혁신처	2	2	0	0	0	0	0	0
조달청	2	2	0	0	0	0	0	0
통일부	2	1	0	0	0	1	0	1
공정거래위원회	1	0	0	0	0	1	0	0
방위사업청	1	1	0	0	0	0	5	18
외교부	1	0	0	0	0	1	726	344
합계	308	115	24	88	50	31	199,357	238,338

1) 과제수 기준 2) '21년 정책과제를 기준으로 '20년 예산 산출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청년정책을 신속하게 마련·집행

① 코로나 19로 인한 청년고용 위축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 코로나 19로 인하여 악화된 청년고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 마련('21.3월)
 - * ① 일자리 창출 : 청년채용 인센티브 확대, 비대면 분야 창업지원 등
 - ② 능력개발 : 청년 스타트업, 그린 트레이닝, 디지털 크레딧 등
 - ③ 맞춤형 고용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패키지 지원, 청년 도전지원 사업 신설 등
 - ④ 일자리 지원기반 : 투자확대 및 규제완화, 취업지원 인프라 보강 등
- 기존 정책에 '21년 추경을 통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참여 확대 등 총 “101.8만명+a” 지원
-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추경 사업 등을 신속히 추진하고, 민간위탁기관, 참여자 등과의 간담회 등 관리 강화
- 취업준비생 편의제고 위해 정부24를 통해 취업 관련 증명서류를 전자증명서로 통합발급받고 일괄 제출하는 서비스 시범 적용('21.하) 행안부
- * 중앙부처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 시범적용하고, 공공·민간기관은 희망 수요조사 및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템 적용 일정을 고려하여 추진

② 공공부문 청년 일자리 조기집행 및 집행관리 강화

- 코로나 19 대응을 위해 “포스트코로나 대응형”(IV)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¹⁾을 신설하고 공공데이터 분야 청년인턴 지원²⁾ 확대 행안부
- * 1)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 '20년 2.6만 → '21년 2.6만
- 2) 공공데이터·빅데이터 분야 청년인턴 : '20년 6,945명 → '21년 8,680명
- 관계부처 합동으로 직접 일자리 추진상황 점검 등을 통한 신속 집행, 청년 등 취약계층 보호 강화 기재부·고용부·복지부·행안부
- * 공공분야 체험형 일자리 신속채용 : '21년 2.2만명 중 1분기 4,200명 신속 채용 ('20년) 1.7만명 → ('21년) 2.2만명 / 전년동기(1,900명) 대비 2,300명 확대

- 주요 회의체(정책점검회의, 고용위기대응반회의 등) 활용 사업별 집행상황 면밀히 관리 고용부
- 공공기관 신규채용 인원확대를 추진('20년 계획 2.5만명→'21년 2.6만명 이상)하는 동시에 상반기 채용을 확대('20년 33%→'21년 45% 이상) 기재부
-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연장('21년→'23년)을 추진하고, 미이행 기관 점검회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반영 등 이행관리 강화 고용부

③ 코로나 블루 극복 및 청년정책 사각지대 해소

-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지원 및 자살 고위험군(자살시도자, 자살 유족) 청년에 대한 심리상담 및 사례관리 지원 등을 통하여 청년층 정신건강 지원('21.5) 복지부
- 보호종료아동 지원방안('21.상) 관계부처합동, 고졸자 취업활성화 방안('21.6월) 교육부 등을 마련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된 청년지원 강화

(1) 일자리 분야

1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역량 강화

- ① 노동시장 진입 촉진 : 노동시장 안팎의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직접 일자리 제공,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등

청년 구직자 지원 주요 사업

구분	주요사업	주요내용
구직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취업취약계층에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 1유형(청년특례), 2유형(취업성공패키지) - 지원인원 확대 ('21,신규) 1유형 10만명 + 2유형 13만명 등 총 23만명 → 청년특례 5만명 추가 총 28만명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고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 지원 - 지원인원 확대 ('20) 29만명 → ('21) 38만명
	청년디지털일자리 ^{부처합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T 활용가능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 지원 - 지원인원 확대 ('20) 6만명 → ('21) 11만명
	비대면·디지털공공일자리 ^{부처합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 도로 데이터 구축 등 대면접촉이 적고 일손이 부족한 분야 직접 일자리 지원 - 지속지원 ('20) 10만명 → ('21) 3.7만명 추가 지원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 ^{행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청년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의 지역 정착 유도 및 지역활력 제고 지원 - 지속지원 ('20) 2.6만명 → ('21) 2.6만명 * 사업평가 및 개선방안 수립 등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
	공공기관 체험형일자리 ^{기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준비청년의 취업역량 향상을 위해 공공기관 직무체험 기회 제공(1/4분기 중 0.42만명 채용) - 지원인원 확대 ('20) 1.7만명 → ('21) 2.2만명
+		
구직단념청년	청년도전지원사업 ^{고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청년센터 활용, 상담·교육 등 통해 청년의 사회 활동 참여의욕 고취 →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연계 - ('21, 신규) 0.5만명
	구직단념청년발굴 및 고용연계 ^{고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직단념청년 현황 파악, 유형별 분석 등 한국형 'NEET' 지표 개발 등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② 그린일자리 창출 및 훈련 강화 : 그린분야 벤처·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그린분야 교육·훈련 지원 강화

그린 일자리 주요 사업

구분	주요사업	주요내용
일자리 창출	그린 스타트업 타운 조성 <small>중기부</small>	▶ 편리한 정주여건, 디지털 근무환경 조성 등 청년 벤처·창업가가 선호하는 그린 스타트업 타운 추가 조성 - '21년 1개소 조성 완료(천안), 1개소 추가 선정
	환경분야 청년창업 생태계 구축 <small>환경부</small>	▶ 환경 아이디어 및 기술성, 사업성이 우수한 청년 환경 창업자 발굴, 정부통합공모 및 후속지원 - ('20) 13팀 → ('21) 25팀
+		
훈련 강화	녹색융합기술 인재양성 <small>환경부</small>	▶ 환경 관련 45개 특성화대학원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등 녹색 융합기술 인재 양성 확대 - ('20) 968명 → ('21) 2,037명
	국민내일배움카드 <small>고용부, 환경부</small>	▶ 산업계 의견수렴 및 연구용역을 통해 국민내일배움 카드 지원 분야에 그린뉴딜 직종을 신규 발굴·추가

③ 재직자 지원 강화

- 청년내일채움공제(2년간 1,200만원 적립) 10만명 신규지원, 사업장 점검 및 위반기업 제재 강화¹⁾, 재가입 기회 확대²⁾ 등 제도 개선 고용부
- * 1) 공제가입 청년 불합리한 대우 실태점검 및 위반 발견 시 차년도 공제 가입 제한 조치 등
2) 기업사유로 인한 휴직, 기업의 지원금 신청 지연, 직장내 성희롱 인한 퇴사 시 재가입 허용, 재가입을 위한 재취업 기간 추가(6개월 → 1년) 금년까지 연장 시행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5년간 3,000만원 적립) 3만명 신규 지원 중기부

④ 취업역량 제고 지원

- 혁신훈련기관을 통한 신기술 역량개발 지원하는 **K-디지털 크레딧** (50만원) **청년 6만명**(기존 4만명 + 추가 2만명) 지급 ('21년 신규) 고용부
- 디지털 신기술 분야 핵심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K-디지털 트레이닝** **청년 2만명**(기존 1.7만명 + 추가 0.3만명) 지원 ('21년 신규) 고용부
- 산업별 협·단체가 주도, 훈련과정에 산업·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 사업 확대 ('20년 1,354명→ '21년 1,485명) 고용부

② 창업활동 활성화 및 내실화

① “아이디어 발굴 → 교육·사업화 → 자금지원 → 재도전” 등 청년 기술창업 전주기에 대해 패키지 지원 강화 중기부, 금융위 등

- 창업지원포털서비스인 **K-Startup** 운영을 통하여 온라인으로도 전주기 청년창업* 지원 중기부

* ①청년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 ②창업역량자가진단키트 → ③사업교육, 멘토링·컨설팅 → ④온라인 법인설립 지원 등

청년 기술창업 전주기 패키지 지원

구분	주요사업	주요내용
아이디어 발굴	창업경진대회 <small>중기부</small> (도전K-스타트업)	▶ 유망한 창업아이템 보유한 예비창업자 경연 대회 - 참여부처 확대 ('20) 7개 → ('21) 10개
교육 · 사업화	청년창업사관학교 <small>중기부</small>	▶ 유망 아이템 및 혁신기술 보유 청년 발굴 지원 - 지원인원 확대 ('20) 523명 → ('21) 533명
	글로벌 창업 <small>중기부</small>	▶ 글로벌 수준 기술교육과 창업기획자의 네트워킹 등 패키지 지원하여 창업기업으로 육성 - 창업기획자 확대 ('20) 4개사 → ('21) 5개사 ▶ 초기창업기업에 6개국 (미, 독, 영, 중, 러, 베) 진출을 위한 현지 엑셀러레이팅, 지원금 지원 등 - 참여기업 확대 ('20) 58개사 → ('21) 120개사
	팁스 TIPS <small>중기부</small>	▶ 민간투자자 및 정부R&D 및 사업화·해외마케팅 자금을 연계지원하여 유망 창업기업 발굴·육성 - 참여기업 확대 ('20) 73개사 → ('21) 80개사
	메이커 스페이스 <small>중기부</small>	▶ 창의적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창작활동공간 '메이커스페이스'를 전국적으로 조성 - 메이커스페이스 확대 ('20) 192개소 → ('21) 254개소
자금 · 벤처투자	청년전용 창업자금 <small>중기부</small>	▶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창업기업 대상 융자(1억원) 및 연계지원 - 지속지원 ('20) 1,600개사 → ('21) 1,600개사
	혁신창업펀드 <small>중기부</small>	▶ 청년 벤처투자 활성화 위해 펀드 조성 - ('21 신규) 800억원 출자, 1500억원 지원
	유망청년창업기업 보증제공 <small>금융위</small>	▶ 창조적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보유한 청년 창업기업 육성하기 위해 보증규모 확대 - 지원규모 확대 ('20) 1.4조원 → ('21) 1.7조원
재창업	재도전 성공 패키지 <small>중기부</small>	▶ 실패경험과 우수 아이템을 보유한 재창업자를 발굴, 재창업자 특성별 패키지형 재창업 지원 - 재창업자 특성별 4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원 (기존) 일반형/민간투자연계형 → (개선) 일반형/채무조정형/IP전략형/TIPS-R

② 농·어업, 소상공인, 문화·콘텐츠 등 주요 분야별 창업지원 강화
농식품부, 중기부 등

분야별 주요 창업지원 사업

분야	주요사업	주요내용
농어업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small>농식품부</small>	▶ 청년농 대상 영농정착지원금(월 최대100만원, 최장 3년), 농지·창업자금·기술교육 등 지원 - ('20) 4.8천명, 314억원 → ('21) 6.6천명(누적), 335억원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 <small>해수부</small>	▶ 청년인력의 어업창업과 어촌정착 유도를 위한 영어정착자금(월100만원, 최대3년) 지원 - ('20) 80명, 5.9억원 → ('21) 80명, 6.2억원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small>농식품부</small>	▶ 스마트팜 온실을 활용하여 영농할 수 있는 청년 농업인 양성 - ('20) 300명, 40억원 → ('21) 500명, 70억원
+		
소상공인	전통시장 복합청년몰 조성 <small>중기부</small>	▶ 청년몰 신규선정시 선정기준 강화*, 온라인 쇼핑몰 진출 지원, 혁신형 청년몰 모델 개발 및 지원금 확대 * 핵심상권 신흥상권 위주로 선정, 상권 등급, 유동인구, 인프라 등 중점 고려 - ('20) 몰당 30억원 → ('21) 몰당 40억원
	임대주택 내 희망상가 공급 <small>국토부</small>	▶ 주변시세 이하(50~80%)로 장기간(최장 10년) 사용 가능한 희망상가 공급 - ('20) 127개 → ('21) 신규 80+a개
	청년식품창업 Lab 운영 <small>농식품부</small>	▶ 국가식품클러스터 시설, 장비, 전문교육 등 창업 전주기 지원 - ('20) 30팀, 4.5억원 → ('21) 46팀, 6억원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small>농식품부</small>	▶ 외식창업 희망 청년에게 창업 전 일정기간 동안 사업장 운영기회 제공 - ('20) 7개소, 9.8억원 → ('21) 7개소, 9.8억원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small>중기부</small>	▶ 생활혁신형 창업 청년에게 성공불 용자(2천만원 한도) 지원 - ('20) 318명, 78억원 → ('21) 500명, 102억원
+		
문화 콘텐츠	게임기업 육성지원 <small>문체부</small>	▶ 경쟁력 있는 신규 게임기업 발굴 및 중소·중견 기업으로의 성장 지원 - ('21신규) 15개 기업 지원, 6.5억원
	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 <small>문체부</small>	▶ 전통문화산업에 특화된 예비 및 초기창업 지원 - ('20) 75팀, 20억원 → ('21) 100팀, 25.5억원

3 청년 일터 안전망 강화

① 일하는 청년 사회보장 강화

- 택배기사, 방과후 강사 등 청년이 주로 많이 종사하는 특고 직종*에 고용보험 확대 적용('21.7월) 고용부
- * 보험설계사, 신용카드·대출모집인, 학습지강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 점검원, 가전제품배송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종사자, 방과후강사
- 추가 적용 특고·플랫폼 직종 선정을 위한 직종 실태조사, 청년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추진('21.하) 고용부
- 자발적 이직자 실업급여 지급에 관한 기초연구* 실시('21) 고용부
 - * 해외사례 조사, 청년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연구용역 결과를 "청년의제 공론회장"에서 공유·논의
- 특고 중 소프트웨어 프리랜서에 대한 산재보험을 적용('21.7월) 고용부
- ① 특고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사유 제한* 및 ② 고위험-저소득 직종 특고에 대한 산재 보험료 한시적 경감('21.7월~) 고용부
 - * 특고종사자가 부상, 질병,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1개월 이상 휴업,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라 특고종사자가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등에 한함
- 청년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추진('21.하) 고용부 등

* 표준계약서 보급 예시 : MCN 산업 내 분야, 프리랜서 강사 분야 등

② 청년 노동권익 보장

-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직장 내 성희롱 피해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추진('21.하) 고용부
- * 명백한 고의 또는 반복적 피해 시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명령
남녀고용평등법 개정(20.10월, 정부안 제출)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및 시행 준비
- 정보공유플랫폼 연동 확대 및 배달시간 산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안전 배달 시간을 산출할 수 있는 방안 검토('21.하) 고용부

④ 공정채용 기반 구축 및 직장문화 개선

① 청년의 공정한 출발 지원

- 민간기업(250개)에 대한 채용전형 설계 및 관계 법령 적용 가이드라인 제공 등 기업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공정 채용 정착 지원** 고용부
-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채용비위 연루자 처벌·피해자 구제 등 **후속조치 이행 철저 점검** *권익위
 - * 전수조사 결과 "채용비위징계양정기준"에 따른 징계요구의 적절성 등 철저히 이행점검
- 공공기관의 **직무능력중심 평가**(직무기술서, 필기, 구조화된 면접 등) 정착·확산하기 위한 워크숍, 컨설팅 실시('21.상) 기재부
- 성차별 없는 채용 확산 위해 기관 인사담당자 **성별균형 인사관리 역량강화 교육** 실시, 노동위원회 **차별시정절차 신설*** 추진('21.상) 고용부·여가부
 - * 성차별 확인시 불리한 행위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 또는 배상 등 노동위 시정명령, 시정명령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등(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중)

② 청년이 일하고 싶은 직장문화 조성

- 임금·일생활균형·고용안정 등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청년친화 강소기업으로 선정**('21년 1222개), 재정금융지원 및 선발시 우대 등 고용부

청년친화 강소기업 선정된 기업 혜택

구분	주요 지원 내용
취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워크넷 메인화면에 구인정보 제공을 통한 기업정보 제공 및 채용지원서비스 제공
금융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한은행 특별협약보증 대출 이용시 금리 0.5% 우대 ■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시 보증우대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 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자금, 연구개발(R&D) 등 중기부 주요 지원사업 신청시 우대
세무조사 제외 기업 선정시 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고용창출 우대 취지에서 「청년친화강소기업」에 대해서 고용비율 계산 시 가중치(2배)를 부여하고 일정비율이상 고용창출한 경우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
병역특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역특례업체 (산업기능요원) 선정 심사 시 가점 등

- **가족친화 인증기업 확대**('20년 4,340→'21년 4,800개) 및 인증기준에 "남성 육아휴직 이용" 가점 항목 배점 상향 여가부

(2) 주거 분야

① 청년 주택 공급 확대

① 도심내 청년특화주택 1.51만호 등 총 5.4만호 공급

- 청년들의 주거 수요에 대응하여, 장기간 거주 가능한 품질 좋은 주택 공급 확대('20년 5.2만호→'21년 5.4만호) 국토부

< 청년 공적임대주택 공급규모 >

청년주택 유형		사업개요	공급 규모 (단위: 만호)	
			'20년	'21년
행복주택		▶ 월평균소득 100% 이하 청년대상, 임대료 주변시세 60~80% 주택 공급	1.4	1.0
(특화주택)	일자리 연계형	▶ 창업, 지역전략산업 종사, 중기근로 청년 대상 주택 공급	0.8	0.86
매입·전세임대		▶ 월평균소득 100% 이하 청년대상, 임대료 주변시세 약50%이하 주택 공급	2.1	3.0
(특화주택)	역세권 리모델링형	▶ 역세권 유휴 오피스, 고시원 등 매입 후 리모델링을 통한 주택공급	0.2	0.5
	기숙사형	▶ 기존주택 등을 활용한 소규모 분산형 기숙사 공급	0.1	0.15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 월평균소득 120% 이하 청년대상, 임대료 주변시세 약85% 주택 공급	1.7	1.4

* 세부 유형별 공급물량은 공급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② 대학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경감

- 연합 행복기숙사, 사립대 행복기숙사, 국립대 기숙사 등 캠퍼스 내외 다양한 유형의 대학생 기숙사 확충(수용규모 0.6만명) 교육부
- 기숙사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현금분할납부 비율('20년 33%→'21년 36%)과 카드납부 비율('20년 21%→'21년 24%) 확대 교육부

② 전월세 비용 경감

① 부모와 별도거주 수급 청년에게 주거급여 분리지급

- 주거급여 분리지급*에 대한 청년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이홈 포털을 활용한 자가진단시스템 반영('21.상), 온·오프라인 매체 활용한 홍보로 주거급여 수혜 청년 확대 추진^{국토부}

* '21년 목표 : 기준중위소득 45%이하 가구의 20대 미혼 청년 약 3.1만명

- 주거급여 지급대상 소득기준 완화(45% 이상) 검토, 기준임대료 현실화(95 → 100%) 추진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1.7월)^{국토부}

② 청년 주거비용 부담 완화

- 청년 전·월세 전세자금 대출*의 공급규모 제한 폐지(기존 4.1조원), 보증료 추가 인하(0.05 → 0.02%)를 통해 청년 주거비 부담 경감('21.상)^{금융위}

* (대상) 소득7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청년, (내용) 전세보증금 7천만원 이하(금리 2.2%)

- 비과세 적금 효과가 있는 분할상환 전세대출 활성화¹⁾(‘21.상) 및 내집마련 부담을 낮춘 초장기(40년) 정책모기지²⁾ 도입 추진(‘21.하)^{금융위}

* 1) 주금공 외 민간보증기관까지 분할상환 전세대출 참여 확대, 비대면 채널 확대

2) 부동산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구입자 등을 대상으로 시범도입

- '21년 8만 청년가구에 저금리로 전·월세 자금 대출* 지원,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통해 청년의 내 집 마련 지원^{국토부}

* 청년전용 대출상품 금리 : 전세자금 대출(1.2~2.1%), 월세대출(보증금1.3%, 월세금 1%)

-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보증료 부담 완화*, 중소기업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생애 1회)을 이사한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21.하)^{국토부}

* 시행 중인 보증료 70~80% 할인 종료(~'21.6) 후 청년가구 보증료 할인 방안 추가 검토

③ 주거 취약청년 지원

① 고시원·반지하 등 거주자의 주거상향 지원

- 12개 선도 지자체¹⁾를 선정하여, 주거취약계층의 발굴과 임대주택 입주정착까지 지원하는 주거상향 지원사업²⁾을 본격 추진('21.상)^{국토부}

* 1) 서울시/강남구/양천구/경기도/광명시/수원시/인천시/미추홀구/대구시/부산남구/광주시/천안시

2) 이주희망자 서류작성 지원, 보증금(50만원), 이사비(20만원), 생필품(20만원) 지원

② 취약 주거지 근본적 개선

- 노후 주택·고시원·상가 등을 매입·리모델링하여 쾌적하고 저렴한 청년임대주택 공급^{국토부}

* (임대료)시세 50%이하, (특징) 에어컨·냉장고 등 필수집기 기본 설치

- 청년이 집중 거주하는 고시원의 경우, 지자체별로 최소 실면적, 창 설치 등 기준을 정하도록 근거규정 마련('21.상)^{국토부}

- 불법건축물 감독관 인력을 증원*, 대학 및 역세권 인근의 불법 방쫓개기를 집중 단속하여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 추진('21.하)^{국토부}

* 건축법(제87조의2) 개정('22.1월 시행)으로 광역시도 및 인구50만 이상 지자체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의무화 → 센터별 인력 증원 추진

④ 청년 친화형 주거모델 보급

○ '좋은 청년주택 만들기' 프로젝트

- 좋은 청년주택 만들기 특별회의 운영 계획안 마련, 특별회의 개최(수시) 통해 청년 의견수렴 및 주거 정책 반영방안 모색('21.상)^{국토부}

○ 생애 첫 청년주거 패키지 지원

- 청년들에게 주거복지정보 및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마이홈' 포털 개선 방안 마련('21.하)^{국토부}

* '전국 공공주택 주거통합포털 구축 ISP' 용역('21)

○ 청년 공유주택 활성화

- 공유주택 모태펀드(200억원)와 투자금(50억원)을 매칭하여 자펀드 조성완료(3월) → 준주택 리모델링 등 시범사업 본격 추진('21.하)^{국토부}

○ 청년친화 도심융합특구(일자리+주거+교육) 조성

- '도심융합특구' 1차 사업지인 3개 광역시(대구, 광주, 대전) 기본계획 수립 지원, 2개 광역시(부산, 울산) 추가 선정 추진('21.상)^{국토부}

- '도심융합특구'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특별법(가칭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21.4)^{국토부}

(3) 교육 분야

① 고른 교육기회 보장 : 장학금 확대, 평생교육 기회 확대

① 대학생 교육비 부담 완화

- 국가장학금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20년 520→'22년 700만원)하는 한편,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국가장학금 개편방안*** 검토('21.하) 교육부

* 「정부지원 장학금 체제 개편 정책연구」추진 ('21.3월~)

- 대학입학금 완전폐지('22년)를 위해 단계적 감축('20년 56%→'21년 70%) 교육부

장학금 지원 주요사업

분야	사업명	주요내용
국가 장학금	국가장학금 I 유형 <small>교육부</small>	▶ 저소득, 중산층 대학생 장학금 지원 - ('20) 82만명 2.33조원 → ('21) 80만명, 2.24조원
	국가근로장학금 <small>교육부</small>	▶ 근로희망 저소득, 중산층 대학생 장학금 지원 - ('20) 10.9만명, 3,183억 → ('21) 13만명, 3,829억원 * 코로나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금 1만명, 250억원 포함
	인문100년 장학금 <small>교육부</small>	▶ 인문사회 분야 우수 대학생 장학금 지원 - ('20) 0.24만명, 195억원 → ('21) 0.34만명, 255억원
	예술체육비전 장학금 <small>교육부</small>	▶ 예술체육 분야 우수 대학생 장학금 지원 - ('20) 571명, 49억원 → ('21) 880명, 78억원
	이공계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small>과기부</small>	▶ 이공계 분야 우수 대학생 장학금 지원 - ('20) 0.86만명, 512억원 → ('21) 0.88만명, 521억원
	전문기술인재 장학금 <small>교육부</small>	▶ 전문대 우수 대학생 장학금 지원 - ('20) 0.1만명, 71억원 → ('21) 0.12만명, 86억원
취업 연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small>교육부</small>	▶ 중소기업 취업 대학생 장학금 지원 - ('20) 0.49만명 394억원 → ('21) 0.5만명, 367억원
	고졸자 후학습 장학금 <small>교육부</small>	▶ 중소기업 선취업 후진학 대학생 장학금 지원 - ('20) 0.7만명, 312억원 → ('21) 0.9만명, 369억원
	농업분야 취창업 연계 장학금 <small>농식품부</small>	▶ 농업분야 취창업 대학생 장학금 지원 - ('20) 0.14만명, 66억원 → ('21) 0.16만명, 72억원

-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20년 1.85% → '21년 1.7%) 및 실직·폐업시 일반학자금 상환유예를 실시하고 사망·심신장애인 채무면제('21.4월~) 교육부

② 대학 미진학 청년 교육비 지원

- 고졸청년의 후학습 장학금 확대('20년 0.7만명→ '21년 0.9만명) 교육부
- 저소득층 청년 대상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인원·지원금액을 확대¹⁾하고, 사업 확대여부 결정을 위한 성과분석²⁾ 추진('21.하) 교육부

* 1) 인원(천명) : ('20년) 8 → ('21년) 15 / 지원단가(만원) : ('20년) 35 → ('21년) 최대 70
2) '21년 평생교육 바우처 성과분석 연구(~3/4분기) → 개선사항 도출(4/4분기)

③ 지역 청년 인재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플랫폼을 확대('20년 3개→'21년 4개), 재정지원사업의 지역 간 균형 제도화¹ 및 국립대 지원 체계화² 추진 교육부

* 1) 고등교육 재정 투자 방향 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학재정배분방향 반영
 2) 국립대 기존 사업의 단계적 개편·통합 등으로 재정 확대 및 효율화 방안 마련

② 청년 미래역량 강화

① 대학 간 공동교육과정 구성·운영, 교육 콘텐츠 공유 등 혁신공유 대학 8개 신기술분야 48교 내외 선정 및 교육과정 운영('21.하) 교육부

* 사업계획수립 및 참여대학 선정공모(1/4분기) → 참여대학 선정(2/4분기) → 교육과정 운영(3/4분기~)

② 디지털 신산업, 그린·에너지 등 분야별 맞춤형 인재양성 지원 확대

맞춤형 인재양성 주요사업

분야	인재양성 사업	주요내용
디지털 신산업	산업혁신인재 성장지원 <small>산업부</small>	▶ 미래신산업을 선도할 석·박사 전문인력 양성 - ('20) 38개 과제 1,015억원 → ('21) 45개 과제, 1,142억원
	스마트공장 전문인력양성 <small>중기부</small>	▶ 스마트팩을 활용한 스마트공장 전문인력 양성 - ('20) 389명 3억원 → ('21) 1,000명 5억원
	혁신성장선도 고급연구인재 성장지원 <small>과학기술부</small>	▶ AI 융합 등 첨단기술분야 박사급 연구인재 양성 - ('20) 4개 연구단 39억원 → ('21) 6개 연구단, 65억원
	ICT 석박사 인재의 핵심 기술관련 R&D 역량 강화 <small>과학기술부</small>	▶ ICT 기술 기반 석·박사급 ICT 핵심인재 양성 - ('20) 57개소 497억원 → ('21) 60개소 584억원
그린 에너지	녹색융합기술 인재양성 <small>환경부</small>	▶ 환경 관련 특성화대학원 지원, 12개 환경 분야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 - ('20) 968명, 187억원 → ('21) 2,037명, 374억원
	미래에너지 인재양성 <small>산업부</small>	▶ 그린뉴딜 등 핵심분야 인재육성 지원, 지역 기업 수요기반 교육 인프라 구축 - ('20) 293명, 325억원 → ('21) 330명, 378억원
	ICT기반 수산인력 양성 <small>해수부</small>	▶ R&D 프로젝트 기반 현장밀착형 전문인력 양성 - ('20) 35명 10억원 → ('21) 38명 12억원
	환경분야 특성화고 <small>환경부</small>	▶ 특성화고 환경계열학과를 선정, 교육프로그램 운영, 산업체 현장 체험실습 등 지원(5개소, 10억원, 신규)
문화관광 · 미디어 · 지식재산	문화콘텐츠 R&D 전문인력 육성 <small>문화체육관광부</small>	▶ 문화기술 관련 석·박사 학위 운영, 예술+과학 융합 연구개발 프로젝트 지원 - ('20) 60명 33억원 → ('21) 100명 62억원
	대학연계 미디어 교육 <small>방통위</small>	▶ 대학과 연계한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 제공 - ('20) 36교 0.29억원 → ('21) 38교 0.3억원
	체계적 지식재산 인재 양성 <small>특허청</small>	▶ IP중점대학 지식재산교육선도대학 운영 등 산업계 수요 대응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 ('20) 3.6만명 35억원 → ('21) 3.2만명, 47억원

③ 산업계 및 학생 수요에 기반한 직업계고 학과개편 및 부처연계형 직업계고 지원 교육부

- 발명·특허('20년 6개→'21년 14개) 특허청 및 환경분야('21년 5개 신규) 환경부 특성화고 확대

③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① 고졸 청년 취업 지원

- 현장실습생·기업현장교사 수당지원¹⁾, 현장실습 선도기업 확대²⁾ 등 직업계고 현장실습을 내실화 교육부

* 1) 현장실습생 월평균 60만원, 기업현장교사 월평균 50만원씩 최대 3개월 지원
2) 현장실습 선도기업 발굴·등록(누적) : ('20) 2만개 → ('25) 3만개

- 중견·중소기업에 취업한 고교 졸업생에 대한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확대('20년 4백만원→'21년 5백만원) 교육부

- 고졸 일자리 발굴 DB 구축('21.5월), 취업지원관을 확대¹⁾ 배치, 공공기관 고졸채용 확대²⁾ 등 고졸 청년 취업 지원 교육부

* 1) 직업계고 취업지원관 배치(명) : ('20) 517 → ('21) 700
2)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적용중인 고졸채용에 대한 비계량지표이외에 계량지표 신설

- 중앙취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공공·민간의 좋은 고졸 일자리 발굴·매칭 등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 마련('21.6월) 교육부

② 대학생 및 청년의 진로지원 강화

- 청년의 후학습 지원을 위한 고숙련 일학습 병행 교육과정 운영 대학(P-TECH) 확대('20년 35교→'21년 49교) 고용부

- 원격강좌 참여대학 확대(161교 → 165교), 군복무경험 학점인정 참여대학 확대(35교 → 40교) 등 군 복무 중 대학 학점취득 기반 확대 국방부

- 국가기술자격 취득 지원, 학습교재비 지원 등 청년 병사 자기개발 비용 지원 대폭 확대('20년 80천명 → '21년 234천명) 국방부

③ 지역인재 양성 직업교육 지원

-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지자체, 지역 내 중소기업의 연계·협력을 통한 직업교육 혁신모델 마련('21.하) ^{교육부}
- 마이스터대학 시범운영 5교 지정·운영*(교당 20억원 지원), 마이스터대학 본격 운영에 앞서 고등교육법 개정 및 설치·운영규정 마련('21.하) ^{교육부}
 - * 사업계획수립 및 참여대학 공모(1/4분기) → 참여대학 선정(2/4분기) → 사업추진(6월~)
- 신산업 분야 선도 전문대학 12교 지정·운영(교당 10억원 지원) ^{교육부}
 - * 사업계획수립 및 참여대학 공모(1/4분기) → 참여대학 선정(2/4분기) → 사업추진(6월~)

④ 온택트 교육기반 구축

- ① 해외 MOOC 우수 콘텐츠 선별하여 한국어 자막 제공(50개 이상), 차세대 K-MOOC 플랫폼* 구축('21.상) ^{교육부}
 - 'K-MOOC 학점은행제' 과정 확대 운영¹⁾, 학습 동기부여 시스템²⁾ 마련 등으로 참여 청년의 인센티브 강화
 - 1) '19년 16개 강좌 → '20년 27개 강좌 → '21년 추가 확대('21.하)
 - 2) 학습 완료시 이용실적 적립 후, 장학재단 기부 또는 도서구입 등으로 활용
 - 청년 등 학습자의 평가(만족도, 강좌후기) 및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신규강좌 개발, 맞춤형 강좌 추천 등 학습자 친화적 학습환경 구축
 - * AI·빅데이터 기반 강좌 추천·맞춤형 학습자 지원, 가상실습 등 다양한 교수법 구현 등
- ② 대학강좌, 코딩·그린·자율주행 등 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 콘텐츠를 연계 통합하는 평생교육 플랫폼(평생배움터) 기반 구축 추진('21.하) ^{교육부}
 - * 평생배움터 구축을 위한 정보전략계획('21.6월) 실시 → 사업계획 수립 및 착수('22.상)

[4] 복지·문화 분야

① 사회출발자산형성 및 재기 지원

① 저소득 청년 자산형성 지원제도 개편^{복지부}

-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지원규모 확대('20년 15,209명 → '21년 18,158명)
- 저소득 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해 기존 5개 사업을 2개로 통합, 청년특화 서비스·인센티브 추가로 지원 내실화*

* 복지부·학계·한국자활복지개발원 제도개편 자문위원단 운영(~5월)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청년의견 수렴 → 지침 개정 및 시스템 개편('21.하)

- ▶ (사업통합) 희망키움통장 I·II,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5개 통장 → (가칭) 희망저축계좌 I·II
- ▶ (청년특화 인센티브) ①청년의 근로활동 유예기간, 적립 중지기간 확대 등 통장 유지 조건 완화, ②청년 특화 종합재무설계 서비스, ③수요자별 사례관리 확대

② 청년 부채 부담 경감

- 코로나 19로 어려운 취업준비생 등 청년 대상 햇살론^{Youth} 공급규모 확대 ('20년 예산 300억원 → '21년 예산 350억원)^{금융위}
- 미취업청년 채무조정(분할상환, 이자감면 등) 지원 대상연령 확대(만 30세 미만→만 34세 이하), 상환유예 기간 확대(4년 → 5년) 지속 추진^{금융위}

② 청년 건강 증진

① 청년층 정신건강 서비스 강화

- 청년 정신건강 특화사업을 7개에서 12개 시·도*로 확대, 코로나 19 장기화로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우울·불안 등 해소 지원^{복지부}

* 부산 인천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청년대상 “심리지원서비스*(마음건강 바우처, 월20만원)” 사업 실시^{복지부}

* 사업계획 수립, 이용자 선정 등(~4월) → 사업실시(5월~) → 성과평가(10월~)

* 사전사후 검사, 청년 욕구에 맞춘 심리상담서비스 제공, 고위험군 청년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연계

② 청년 건강 인프라 확대

- 정신건강검진(우울증) 결과 우울증 의심 청년을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하는 등 정신건강 사후관리강화 방안 마련('21.하)^{복지부}
- 신입생 등 정신건강검사, 국립대 상담 클리닉 운영, 대학 내 상담인력 확충(학생1,000명당 1명) 등 대학생 마음건강 지원 강화('21.상)^{교육부}

③ 청년 취약계층 지원 확대

① 보호종료아동 지원 강화

- 보호시설에서의 보호가 종료된 청년이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립수당(월30만원) 지원인원 확대(7.8천명 → 8.0천명) ^{복지부}
 - 아동복지법상 자립지원 대상 규정(5년 이내)을 고려, 현행 3년인 자립수당 지원기간을 **5년으로 확대** 검토 추진
 - 보호종료아동의 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 자격 명시화('21.3월) ^{고용부}
 - 보호종료아동 명칭 개선, 체계적 자립지원 및 사후관리 방안 등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방안 수립·발표* ('21.상) ^{관계부처합동}
- * 관계부처합동(총괄:국조실) 보호종료청년 자립지원강화 TF운영(4월~), 정책연구 추진(4~6월)

② 청년정책 사각지대 해소

- 가출청년 등 위기청년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자립지원수당* 신설 ^{여가부}
- * (지원인원) 쉼터퇴소청년 70명, (수당금액) 30만원/최대36개월 지원
- 청년 1인가구의 고독·고립 방지를 위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 센터를 중심으로 사회관계망, 관계개선, 상담 등 지원 ('21.상) ^{여가부}

- ▶ 1인가구 사회관계망 지원 : 자조모임 등 위한 온라인 소통 플랫폼 구축 운영
- ▶ 1인가구 관계개선, 일상생활 등 지원 : 나눔 요리 교실, 취미·여가 프로그램 운영
- ▶ 1인가구 심리·정서 지원 : 사전 사후검사를 통한 필요 심리 서비스 지원

③ 청년 장애인 지원 내실화 ^{교육부}

- 장애대학(원)생 원격수업 보조(자막제작, 문자통역 등) 지원금액 확대(학교당 年720 → 과목당 年1,000만원), **교육지원인력 시급 확대**(일반 16% ↑, 전문 19% ↑)

④ 빈곤청년 근로인센티브 확대 ^{복지부}

- 기초생활수급 청년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¹⁾, 등록금 공제²⁾** 지속 추진
- * 1) 24세 이하 청년 또는 대학생의 근로·사업소득의 40만원 + 30% 공제
- 2) 등록금을 본인 또는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으로 지출한 경우, 해당 지출금액 공제

④ 문화가 있는 청년의 삶

① 청년의 문화콘텐츠 분야 도전·혁신 지원

- 모험투자펀드, 콘텐츠기업 재기지원 펀드 등 4개 분야 펀드 조성을 통해 청년·중소기업 콘텐츠 금융지원* 강화 문체부

▶(모험콘텐츠) 기획개발 등 제작초기단계 및 소외장르에 투자('20년~'22년 총 4,500억원)
▶(방송·OTT영상콘텐츠펀드) 영상 분야의 프로젝트 및 기업에 투자('21년, 300억원)
▶(콘텐츠기업 재기지원펀드) 코로나파해기업, 재창업기업 및 프로젝트에 투자('21년, 250억원)
▶(가치평가연계펀드) 콘텐츠가치평가 분석을 받은 프로젝트에 투자 ('21년, 100억원)

- 인적기반 및 창작 경험이 부족한 청년 등 신진예술인 3,000명 대상 창작준비금 200만원 지원, 지속적인 창작활동 뒷받침('21년 산규) 문체부
- 예술경력 2년 미만의 신진예술인에게 완화된 예술활동증명 심의 세부기준 적용하여 예술인복지사업 참여 기회 확대('21년 산규) 문체부
- 청년들의 아이디어에 기반한 비대면 콘텐츠 산업 육성 문체부

비대면 콘텐츠 산업 육성

분야	인재양성 사업	주요내용
대중음악	ICT-음악 콘텐츠 상용화 지원	▶ 대중음악 기획·생산·유통·소비 단계에 정보통신기술 접목한 콘텐츠 상용화 지원('21년, 14억원)
	플랫폼 기반 대중음악 활성화 지원	▶ 잠재력 있는 청년 뮤지션 등 발굴하여, 음원 콘텐츠 제작, 공연 개최 지원('21년, 29억원)
	온라인 대중음악 공연 제작지원	▶ 대중음악 공연 경쟁력 향상 위해 중소기업사 등의 온라인 공연 제작비용 지원('21년, 65억원)
웹툰·차세대 융복합	웹툰융합센터 조성	▶ 만화·웹툰 창작 및 사업, 교육 공간이 집적된 시설 조성하여 콘텐츠 개발 활성화('21년, 40억원)
	만화콘텐츠 창작 지원	▶ 다양성 만화 55개 과제 제작 지원, 만화 기획개발 75개 과제 지원('21년, 23억원)
	차세대 융복합 콘텐츠 제작지원	▶ 실감콘텐츠 제작 지원('21년, 177억원), 위치기반 실감콘텐츠 개발('21년, 36억원), 인공지능 연계 콘텐츠 제작 및 사업화 지원('21년, 43억원)

② 청년문화 활동기반 강화

- 저소득층 청년 대상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인상(9만원 → 10만원) 및 지원인원 확대(24만명 → 25만명) 문체부
- '22년 이후에는 모든 기초·차상위계층 청년에게 문화누리카드 지급
- 청년문화예술가들에게 '문화가 있는 날'에 공연 기회(무대·장비 등), 예술가 지원금 및 공연진행비 지원(410팀, 67억원) 문체부

[5] 참여·권리 분야

① 정책결정 과정에 청년 주도성 확대

- 청년참여위원회 기준 마련, 청년위원 청년인재 DB 구축 및 선정 기준 개선과 함께 청년참여 위원회 지정 비율 확대* 추진 국조실
- * 중앙정부 : ('20년) 13.9% → ('21년) 17.1%, 지방정부 : ('20년) 0.6% → ('21년) 6.5%
- 정부위원회 청년참여 1차 계획*에 따른 추진현황 점검·독려 (분기별), '청년참여 위원회 확대방안' 수립('21.7월) 국조실
- * 중앙정부 135개, 지방정부 17개 등 총 152개 위원회를 청년참여위원회로 지정
- 대학 현장 의견수렴 및 검토를 거쳐 대학 내 주요 의사결정 기구의 학생 참여 비율이 10% 이상 되도록 세부 권고기준 등 마련('21.상) 교육부
-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부처가 협업하는 정기적(반기) 공론화장 운영을 통해 청년의 정책수요를 반영한 청년의제 발굴 국조실

② 청년정책 추진기반 마련 및 내실화

- 청년정책 추진기반 강화를 위해 청년정책 연구원 지정·설립 추진 국조실
- * 청년 연구기반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경인사研, 3~6월) → 운영방안 구체화(6월~)
- 청년기본법 시행('20.8)에 따라 관련 법령·조례 정비 및 청년 권익 증진을 위한 분야별 지원법령 제·개정 방안 마련('21.하) 국조실, 법제처

❖ 정비 기본방향(안)

① 「(가칭)청년권익증진에 관한 법률」 마련

* (예) 청년 노동자 권익보호, 불법건축물 감독관 운영, 고등·평생교육 지원, 문화생활 지원, 청년시설 설치·운영 관련 등

② 관련법령 정비 : 지자체 청년정책 관련조례(500여개), 평생교육법 등

- 청년정책 주요 분야별 통계 및 조사관리, 청년현황 및 지역별 특성 반영 등 청년 실태조사 및 통계 체계화 방안 마련('21.하) 국조실

③ 청년친화적 정책 전달체계 확립

- 온-오프라인 통합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 방안 수립(‘21.하) 국조실 등
 - * 관계부처(국조·행안·고용)와 민간 합동 전달체계 TF 구성·운영(4월) → 방안 도출(‘21.하)
- 온라인 청년정책 통합 플랫폼(‘온라인 하나로’) 구축 (‘21.하) 국조실, 고용부
 - * 청년정책조정위(국조실), 온라인 청년센터(고용부) 등 온라인 사이트 현황 분석 및 관계부처 통합 TF 구성·운영(4월) → 정부 플랫폼 통합 운영 및 지자체 연계 강화 방안 수립(‘21.하)
- **12개 신규 청년거점공간을 선정**(‘21.3월)하고, **청년마당 표준운영 계획**을 수립(‘21.10월)하여 서비스 보편성·효율성 확보 행안부
- **청년 역량과 지역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지역 공간 조성, 관광 활성화 등 추진**

청년 공동체 구축 주요사업

사업명	주요내용
① 청년자립 및 활력 지원 사업 <small>행안부</small>	▶ 청년활동공간 조성, 지역 취창업 체험, 주민소통 등 - 인구감소 지역 내 청년마을 12개소 신규 설치
② 청년두레 지원 <small>문체부</small>	▶ 지역공동체가 주도하는 관광사업체 창업 지원 - 신규 청년두레 40개팀 지원
③ 로컬 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small>중기부</small>	▶ 지역 내 자연·문화자산으로 새로운 가치 창출하는 사업 -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160팀 신규 지원

④ 청년 권익보호 및 청년교류 활성화

-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 권고를 통해 인권센터를 **확충***하고,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인권센터 설치 의무 법제화** 교육부
 - * 고등교육기관 인권센터 설치 비율 : (‘20년) 37% → (‘21년, 목표) 45%
- **청년 대상 노동, 금융, 주거 등 관련 상담교육을 강화**하여 피해예방 공정위 등
 - * 대학생 다단계 등 특수거래 소비자 피해예방 홍보 및 교육(공정위), 청년층의 적극적 자산·신용관리 및 금융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교육 프로그램 마련(금융교육협의회, ‘21.4월)
- **코로나19 확산 지속에 따른 국외 현장학습 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글로벌 현장학습 온라인 프로그램 도입·운영** 교육부

① 주기적·체계적 점검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를 중심으로 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주기적(반기별) 점검 및 체계적 분석을 통해 이행상황을 철저히 관리
 - 특히, 직접 일자리, 자금 지원 사업은 코로나 상황 등을 고려해서 조기집행 될 수 있도록 점검·관리
- 지연과제의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제도개선 등 보완방안 마련

② 신규과제 발굴 추진

- 기존 과제를 성실 이행 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청년과 함께 새로운 기획을 통해 청년이 체감하고 주인공 되는 신규 과제 발굴 및 발표 추진

③ 시행계획 평가

-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하여 부처별 실행을 담보하고, 차년도 시행계획 반영 등 정책 대안 모색
- 평가시 청년들의 정책만족도 반영, 평가위원회 구성시 청년 포함 등을 통하여 청년관점에서 청년정책 성과 분석 추진

④ 청년 정책 거버넌스 구축 관련

- '21년 중앙·지방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연석회의(민간 중심), 중앙·지방 청년정책책임관협의회의(정부 중심) 등 통해 협업 강화

정부-민간 Two-Track으로 청년정책 지역협력 체계 구축

▶ (정부) 중앙부처-광역지자체 청년정책책임관 회의 운영(분기별, '21~)

▶ (민간) 중앙-지방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연석회의* 운영(반기별, '21~)

* 중앙-지자체 청년정책조정위원으로 구성, 연석회의를 통해 중앙-지자체 청년 정책 공유, 지역의제 발굴, 청년정책 협력방안 마련 등 논의

참고 1

'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주요사업 추진 일정표

	정책 과제	추진시기	부 처
1 분기	▪ '21년 학자금대출 기본계획 수립	'21.1월	교육부
	▪ '21년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등 지원 기본계획 수립	'21.2월	교육부
	▪ 문화누리카드 지원 확대	'21.2월	문체부
	▪ 청년창업사관학교 11기 입교자 선정	'21.2월	중기부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기본계획 수립	'21.2월	교육부
	▪ 마이스터대 시범운영 사업 기본계획 수립	'21.2월	교육부
	▪ '21년 직업계고 현장실습 기본계획 수립	'21.3월	교육부
	▪ 대학내 의사결정기구 청년참여 세부 권고기준 마련	'21.3월	교육부
	▪ 제대군인 지원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 마련	'21.3월	보훈처
	▪ '21년 캠퍼스 혁신파크 공모 선정(2곳)	'21.3월	국토부
	▪ 주거 취약계층 주거지원 소득기준 완화(업무처리지침 개정)	'21.3월	국토부
	▪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적용을 위한 규정* 개정 *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21.3월	문체부
	▪ 가족친화 인증기준 개선 및 컨설팅 내실화	'21.3월	여가부
	▪ 청년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지원 계획 마련	'21.3월	여가부
	▪ 마음건강 바우처 지역사회서비스 신규 표준모델 마련	'21.3월	복지부
	▪ 비진학 일반고 특화훈련 참여자 진로상담 강화방안 마련	'21.3월	고용부
▪ 글로벌 청년창업사관학교 2기 입교자 선정	'21.3월	중기부	
2 분기	▪ 행복기숙사 신규사업 선정(1차, 사립대)	'21.4월	교육부
	▪ 사망·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 시행	'21.4월	교육부
	▪ 예비창업자 패키지 지원대상 선정	'21.5월	중기부
	▪ 한국판 뉴딜관련 산업지원인력 지원 확대 * 업체 선정, 배치 인원배정 고시	'21.5월	병무청
	▪ K-MOOC 신규강좌 선정 결과 발표	'21.4월	교육부
	▪ K-MOOC 플랫폼 구축	'21.6월	교육부
	▪ 대학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 추진	'21.6월	교육부
	▪ 청년의제 공론화장 1차 개최	'21.6월	국조실
	▪ 좋은 청년주택 만들기 특별회의 개최	'21.5월	국토부
	▪ 청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추가지급을 위한 자격기준 변경	'21.4월	여가부·복지부
	▪ 2021년 해커톤 개최	'21.5월	환경부
	▪ 고졸청년 취업 활성화 방안 마련	'21.6월	교육부
	▪ 공공기관 청년인턴 채용실적에 대한 경영평가 강화	'21.6월	기재부
	▪ 창업 재도전 패키지 지원대상 기업 선정	'21.6월	중기부
	▪ 청년가구 전세금보증료 인하 위한 관련 규정* 개정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내규 개정	'21.6월	국토부
	▪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대출 보증제도 개선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내규 개정, 금융기관 대출시스템 개선	'21.6월	국토부
	▪ 산재보험 적용확대를 위한 관련법령* 개정 * 산재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21.6월	고용부
	▪ 청년체감 공정과제 제도개선 권고	'21.6월	권익위

	정책 과제	추진시기	부 처
상반기	▪ 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양성 사업('19~'21년) 개편방안	상반	과기부
	▪ 임신중 육아휴직 허용을 위한 남녀고용법 개정 추진	상반	고용부
	▪ P-TECH 운영방향 및 모집계획 마련	상반	고용부
	▪ 보호종료아동 지원 강화 방안 마련	상반	복지부
	▪ 청년 전·월세 대출 확대, 보증료 인하를 위한 규정 개정 * 주금공 내규 개정	상반	금융위
	▪ 병사목돈 마련 지원을 위한 병역법 개정	상반	국방부
3분기	▪ 청년디딤돌 병역 진로설계 신규센터 3개 개관	'21.7월	병무청
	▪ 청년 주거급여 대상확대 및 지원 강화 검토(중앙생활보장위원회)	'21.7월	국토부
	▪ 도심융합특구 지자체별 기본계획 수립	'21.7월	국토부
	▪ 정부위원회 청년참여 확대방안 마련	'21.7월	국조실
	▪ 중앙-지방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연석회의 개최	'21.9월	국조실
	▪ 혁신벨리 1차지역 임대형 팜 완공·운영	'21.9월	농식품부
	▪ 방위산업 창업 발전계획 수립	'21.9월	방사청
4분기	▪ 특고 추가 적용직종 최종선정 및 적용방안 마련	'21.10월	고용부
	▪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발표	'21.12월	권익위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사업 연장방안 검토	'21.12월	국토부
	▪ 청년 실태조사 추진방향 마련	'21.12월	국조실
	▪ 청년식품창업센터 착공	'21.12월	농식품부
	▪ 청년농 농지 지원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21.12월	농식품부
하반기	▪ 청년관련 법령 정비계획 마련	~연내	국조실
	▪ 불법건축물 감독관 운영방안 마련	~연내	국토부
	▪ 주거포털 마이홈 개선방안 마련	~연내	국토부
	▪ 지역별 청년거점공간(가칭 청년마당) 표준운영계획 수립	~연내	행안부·국조실
	▪ 희망저축계좌 통합 및 재구조화 방안 마련 * 청년대상 통장유지조건 완화, 종합재무설계 및 사례관리 강화	~연내	복지부
	▪ 청년주택 마련지원을 위한 초장기 모기지 도입방안 마련	~연내	금융위
	▪ 군 복무중 학점취득 참여대학 확대	~연내	국방부
	▪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연장('21년→'23년)	~연내	고용부

참고 2

법률 및 하위법령 등 개정 필요사항 및 계획

분 야	과제명	제·개정 법령명	소관 부처	일정
일자리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연장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	고용부	'21.하
	산재보험 적용확대	산재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안	고용부	'21.6월
	출산 육아 참여권리 보장(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고용부	'21.6월
	직장 내 성희롱 근절 강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고용부	'21. 상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보훈대상 미등록 경상이자 취업 지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보훈처	'21.하
주거	청년가구 전세금 보증료 인하	주택도시보증공사 내규 개정	국토부	'21.6월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 보증제도 개선	주택도시보증공사 내규 개정 금융기관 대출시스템 개선	국토부	'21.6월
	청년 전월세 대출 확대, 보증료 인하	주택금융공사 내규개정	금융위	'21. 상
복지 문화	청년병사 목돈마련지원(재정지원금(추가금리 1%) 지급)	병역법 개정	국방부	'21.상
	신진예술인 예술활동 증명 완화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문체부	'21.3월
참여 권리	대학 인권센터 설치	고등교육법 개정	교육부	'21.6월
	청년 관련 법령 체계화	(가칭)청년권익증진법 제정	국조실	'21. 하

1호 안건

제1차 청년정책 청년정책 기본계획('21 ~ '25)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지방자치단체]

2021. 3. 30.

관계기관 합동

☐ ☐ 목 차 ☐ ☐

I. 수립배경 및 주요경과	41
II. '20년 지자체 청년정책 대표 사례	44
1. 청년정책 추진성과	44
2. 청년정책 추진 거버넌스 기반 마련	48
III. 시행계획 추진과제 개요	50
1. 추진과제 개요	51
2. 분야별 주요내용	52
3. 향후계획	64

I. 수립배경 및 주요경과

1 수립 배경

- 청년의 행복한 삶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청년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년)」 수립(‘20.12.23)
 - 청년이 원하는 삶을 주도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대 분야 20개 중점과제, 270개 세부과제 마련
- 발표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수립 추진

2 법적 근거

- 「청년기본법」 제8조 및 제9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부칙 제3조

【청년기본법】

제8조(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무총리는 5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국무총리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침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해야 한다.

부칙 제3조(시행계획 수립 지침의 통보에 관한 특례) 2021년도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지침은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3

수립 주체

- 「청년기본법(제9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주체는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 중앙행정기관 :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관련 32개 기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달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 지방자치단체 : 17개 시·도지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및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4

수립 경과 : 민-관, 중앙-지자체 협력, 청년과의 소통

-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년)」 수립·발표

(제2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20.12.23)

- 중앙-지방,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안) 마련

- (중앙-지방 협업)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중앙부처 및 지자체 협력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시행계획(안) 마련 및 제출(’21.1.31.)

* 2021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시행계획 수립지침 통보(’20.12월말)

* 시행계획 작성 관련 중앙-지자체 온라인 설명회(’21.1월초)

- 부처협의, 지자체 협업(부단체장 간담회, 실무자 회의)

- (민·관 합동)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본위원회 민간위원 중심으로 시행계획(안) 검토 및 조정

- (청년 소통) 청년과의 소통, 현장방문 등을 통한 시행계획 보완·검토

- 시행계획(안)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 심의·의결(’21.3.23)

- 시행계획(안)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의·의결(’21.3.30)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체계도>

비전

원하는 삶을 사는 청년, 청년이 만들어 가는 미래

방향

청년의 삶을 청년이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삶의 공간 △안정적 토대를
 다양한 청년에게 권리로 보장

3대
원칙



5대
정책
방향
및
중점
과제



II. '20년 지자체 청년정책 대표 사례

※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선정·제출한 청년정책 사례 정리

1 청년정책 추진성과

1 (일자리) 취업기회 제공, 구직활동 지원, 창업 지원, 일자리 센터 운영 등을 통하여 청년의 취·창업을 지원

① (취업기회 지원) 청년을 “꿈사다리 공부방” 학습 선생님이로 채용(전남), 작은학교 살리기 등 공익 프로젝트 청년인턴 운영(경남) 등 취업기회 제공

▶ (전라남도) 「꿈 사다리 공부방」 (150명, 20억원)

고학력·미취업 청년을 지역아동센터 학습선생님이로 채용(월 103만원) → 아동의 기초학력 보강 및 청년에게 일 경험 제공

▶ (경상남도) 「청년인턴제」 (130명, 4억원)

마을 공동체 활동, 작은 학교 살리기 등 공익프로젝트에 공공인턴으로 고용하여 청년 일자리 마련

② (구직활동 지원) 드림체크카드(인천), 구직자 무료정장 대여 지원 (충북)을 통하여 청년의 구직활동 부담을 완화

▶ (인천광역시) 「드림체크카드」 (840명, 28억원)

청년에게 구직활동지원금·생활비 지급, 취업지원 프로그램 연계 → 청년실업 해소

▶ (충청북도) 「희망날개(청년 구직자 무료 정장 대여)」 (1,800명, 0.72억원)

입사 면접용 정장 무료대여 및 코디 컨설팅

▶ (부산광역시) 「청년 사회진입 활동비(부산 청년 디딤돌카드) 지원」(2100명, 20억원)

미취업청년들의 취창업 활동에 전념하기 위해 월50만원, 6개월 지원

③ (창업 지원) 청년 기살리기(경북), 청년농업인 온택트교육(제주), 강원 Jobs 프로젝트(강원) 등을 통하여 청년의 창업 지원

▶ (경상북도) 「청년기살리기」 (약 700개 업체, 12억원)

창업보육센터 입주 청년기업 임대료 감면, 온라인 제품판매 지원, 창업가 재창업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온택트 교육」 (40명, 0.1억원)

청년농업인 대상 농작물 재배관리 및 농업경영·마케팅 교육 등을 온택트로 진행

▶ (강원도) 「사회혁신 청년활동가 양성 '강원 Jobs' 프로젝트」 (18명, 3억원)

청년의 사회적 경제 조직 일 경험 및 맞춤형 교육 제공을 통한 육성 및 지원

④ (센터 운영) 청년 일자리 카페(광주), 더큰 내일센터(제주) 등에서 취·창업 공간 및 프로그램 제공 등 취·창업 통합 서비스 운영

▶ (광주광역시) 「청년 일자리 카페」 (이용인원 13,133명, 5억원)

취·창업을 위한 공간 제공, 각종 아카데미 등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제주특별자치도) 「더큰 내일센터 운영」 (이용인원 250명, 58억원)

교육훈련, 기업연계 실습·인턴십 및 창업 통합지원 → 청년 일자리 생태계 조성

② (주 거) 청년 맞춤형 주택 공급, 주거문제 해결에 청년의 참여 거버넌스 구축 등을 통하여 청년의 주거부담을 완화

① (청년주택 공급) 더 행복한 주택공급(충남), 이웃사촌 시범마을 청년 주거공간 조성(경북) 등 청년주택 공급 확대

▶ (충청남도) 「더 행복한 주택공급」 (1,000세대, 2,404억원)

청년 등을 대상으로 저렴한 가격(보증금 5천만원, 월세 15만원)에 주택 임대

▶ (경상북도) 「이웃사촌 시범마을 청년주거공간 조성」 (70세대, 48억원)

청년 행복주택 및 임대주택을 건립하여 청년의 지역정착률 제고

② (청년 맞춤형 주택 확대) 세종형 세어하우스(세종), 청년 공유주택 및 민간참여형 청년주택(경남) 공급 등 청년 친화적 주택공급 확대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형 세어하우스」 (15명, 0.4억원)

저소득층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인근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

▶ (경상남도) 「청년공유주택 거북이집 및 민간참여형 청년주택공급」 (17명, 2.6억원)

기존 주택을 리모델링하여 청년에게 인근 시세의 약 50%가격으로 임대

③ (교 육) 미래 일자리수요에 적합한 청년의 역량 강화 지원 및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① (역량 강화) 청년재직자를 위한 온택트 직무교육(강원), 대경혁신 인재양성 프로젝트(Hustar) 운영(대구) 등 청년의 역량 강화 지원

▶ (강원도) 「청년재직자를 위한 온택트 직무교육」 (188명, 0.1억원)

직무역량 강화 교육, 일자리 사업 소개 등을 온라인 쌍방향 형태로 실시

▶ (대구) 「대경혁신인재양성 프로젝트(HuStar)」 (315명, 102억원)

혁신대학·혁신아카데미 사업단을 선정 → 로봇, 미래차 등 혁신분야 교육 지원

② (진로탐색 지원) 청년희망학교(전남), 청년 진로콘텐츠 발굴 프로젝트(광주), 청년 인생설계학교(서울) 등을 통해 주체적 진로탐색 지원

▶ (전라남도) 「청년 희망학교」 (150명, 1억원)

청년의 역량강화를 위해 3대분야별(역량강화, 진로탐색, 자기개발) 교육 실시

▶ (광주광역시) 「청년 진로콘텐츠 발굴 프로젝트」 (9명, 0.25억원)

자아탐색 교육 및 직업인 직무 연구 방법 교육 등을 통해 진로 탐색 지원

▶ (서울특별시) 「청년 인생설계학교」 (500명, 11억원)

자아발견, 일-삶의 조화 등 주체적 가치관 모색 지원을 위해 워크숍, 멘토링 지원

▶ (충청북도) 청년키움스쿨 운영(406명, 0.16억원)

청년에게 필요한 강의를 청년이 주도적으로 기획·운영, 참여자 진로 탐색

③ (교육-일자리 연계) 대학생 취업브리지(경기), 지역특성화산업 전문 인력 양성(전북), 삶기술학교(충남)을 통하여 청년의 빠른 취업 지원

- ▶ (경기도)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 (300명, 25억원)
기업수요 반영하여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전공과정 개발·운영하고 현장실습 실시
- ▶ (전라북도)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 양성」 (260명, 40억원)
현장중심의 융복합 산업인력 확보와 기업수요에 맞는 전문 인력양성 → 우수인력 지역 정착 지원
- ▶ (충청남도) 「삶기술학교」 (40명, 4억원)
농촌 지역 정착을 위해 '삶기술학교'에서 3개월간 교육하고, 청년이 교육 내용을 활용하여 합동 커뮤니티형 기업을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

④ (복지·문화) 마음 및 몸 건강을 지원하고, 문화창작자로서 청년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① (건강 보호) 청년 마음건강 지원(대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경기) 등 청년의 건강권 보호

- ▶ (대전광역시) 「청년 마음건강 지원」 (800명, 2억원)
민간 상담소(3개소)를 활용, 청년 특화 마음건강 자가진단, 전문 마음 상담 등 실시
- ▶ (경기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지원」 (83,000명, 28억원)
직업군인이 아닌 일반병사로서 현역병 등 군복무 중인 청년에 대해, 군복무 중 사망, 상해·질병후유장애 등에 대한 보험 지원

② (문화·예술활동 지원) 온라인 창작활동 지원(방구석 프로젝트, 부산), 청년 문화기획자·예술가 지원(인천), 디어 청년(경남) 등 청년의 문화 창작 및 향유 지원

- ▶ (부산광역시) 「비대면·온라인 창작활동 지원 '방구석 프로젝트」 (44명, 1.3억원)
코로나로 인해 현장 활동이 어려운 청년 예술인들에게 어린이 대상 체험형 문화예술 영상콘텐츠 제작비 지원
- ▶ (인천광역시) 「청년 문화기획자, 예술가 지원」 (19명, 0.8억원)
청년 예술가·기획자들이 지역내에서 공연활동·지역 상인 브랜드 기획 등 지역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활동공간 및 교육·멘토링 지원
- ▶ (경상남도) 「디어청년, 인문학이 필요한 오늘이야」 (176명, 0.4억원)
인문학 강의·참여프로그램 제공 및 신청자의 고민을 반영하여 책 처방사가 선정한 '책 처방' 프로그램 운영

③ (자산형성) 희망공제사업(울산), 희망디딤돌 통장(전남) 등 청년의 목돈 마련을 통한 사회출발형 자산형성을 지원

- ▶ (울산광역시) 「울산청년 희망공제사업」 (35명, 1억원)
 - 제조 중소기업에 2년이상 재직중인 저소득(월 350만원이하) 지역 미혼청년의 목돈 마련을 위해 시와 재직자가 공동으로 36개월 적금 부담(시 : 20만원, 근로자 30만원)
- ▶ (전라남도)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2,500명, 25억원)
 - 저소득 청년 취·창업자(중위소득 120% 이하)와 시가 1:1로 저축액을 매칭(각 10만원) 하여, 3년 만기 후 목돈을 출금할 수 있도록 지원

5 (참여·권리) 청년문제를 스스로 발굴·해결할 수 있도록 예산 및 정책 결정과정에 있어 청년의 참여 보장

① (참여 확대) 청년 자율예산(서울), 소셜리빙랩(대구), 청년주거 문제해결형 청년정책 플랫폼(경남) 운영 등 정책결정 과정에 청년의 참여 보장

- ▶ (서울특별시) 「청년자율예산 운영」 (16개 사업, 242억원)
 - 청년이 중심이 되어 정책아이디어를 발굴·숙의하고, 발굴된 과제는 온라인 투표 및 서울시 의회 상임위 등을 거쳐 최종 예산으로 반영
- ▶ (대구광역시) 「소셜리빙랩」 (20팀, 1.5억원)
 - 청년이 사회문제를 발굴·해결하기 위한 실험활동비를 지원하여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사회 참여 역량 강화
- ▶ (경상남도) 「청년주거 문제해결형 청년정책 플랫폼」 (0.8억원)
 - 경남 맞춤형 청년 주거지원 방안 수립을 위해 귀농 청년 등 다양한 청년과 함께 핵심 의제를 설정하고, 의제별 해결방안을 도출하여 관계부서에 필요 조치 통보

② (청년공간 조성) 청년공간지도 맵 브릿지(울산), 온라인 청년플랫폼(전북), 청년센터 세청나래(세종) 등 온-오프라인 청년공간 조성

- ▶ (울산광역시) 「청년공간지도 맵 브릿지」 (1억원)
 - 청년 모임·청년 활용 공간을 발굴하여 온라인 지도의 형태로 구축하고, 청년에게 이를 홍보하여 지역 청년간 교류확대 지원
- ▶ (전라북도) 「청년정책 원스톱 상시 상담 창구 운영」 (5억원)
 - 청년정책 온라인 정보 플랫폼 구축 및 '청년콜센터' 운영을 통해 청년정책 안내
- ▶ (세종특별자치) 「청년센터 '세청나래」 (5억원)
 - 청년의 세종시 정착·자립을 위한 전담 지원 조직을 구축하고, 청년에게 교류 거점 공간을 제공하여 지역 청년의 역량강화 기반 마련

③ (청년교류 지원) 2020년 청년주간(부산), 청년 농업인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경북) 등을 통하여 청년의 자발적인 교류 지원

- ▶ (부산광역시) 「2020년 청년주간」 (5,000명, 2억원)
 - 청년이 직접 컨퍼런스 주제 선정(8개 세션)하고, 컨퍼런스 행사기획까지 진행하여 청년 이슈에 대한 주체적인 담론의 장 형성
- ▶ (경상북도) 「청년 농업인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23명, 2억원)
 - 청년 농업인 커뮤니티 공간 및 활동 지원을 통해 청년의 지역정착 지원

2

청년정책 추진 거버넌스 기반 마련

- ◇ 17개 시도는 청년(기본)조례를 제정·운영하는 등 법적 기반을 구축하고, 청년책임관·전담조직 지정 등 제도적 기반도 강화
-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네트워크 운영 등 정책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참여기반을 강화
 - 특히 서울·제주 등에서는 청년참여 예산제도를 통하여 청년이 정책을 직접 기획, 예산을 편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운영

1 (법·제도) 청년기본 조례 제정 및 청년전담조직 운영

- 17개 광역자치단체 모두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
 - 대부분 지자체에서 기본조례 외 취업지원 등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운영하는 등 법적 기반 구축

광역지자체 청년 관련 조례 제정 현황

지자체	분야	조례명
서울	일자리	①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 ②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③청년 창업 지원 조례
	주거	①청년주거 기본 조례 ②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참여권리	①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②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부산	참여권리	①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대구	일자리	①청년 취업지원 등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인천	일자리	①인천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
광주	일자리	①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 ②청년 창업 지원 조례 ③청년일자리 창출 기본 조례 ④청년프리랜서 지원 조례
	복지문화	①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울산	일자리	①청년 구직 지원 조례 ②청년창업 지원 조례
대전	일자리	①청년창업 지원 조례 ②청년취업희망카드 조례
	주거	①청년근로자 숙소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세종	일자리	①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②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경기	일자리	①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②청년 창업 지원 조례
	복지문화	①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②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 조례 ③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참여권리	①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강원	일자리	①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충북	일자리	①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충남	일자리	①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②청년 창업지원에 관한 조례 ③청년농수산인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북	일자리
전남	일자리	①청년구직지원 조례 ②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③청년창업 지원 조례 ④청년 창농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복지문화	①청년이 돌아오는 전라남도 농어촌 만들기 조례
경북	일자리	①청년 미취업자 등의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 ②청년창업지원 조례 ③청년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
경남	일자리	①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②청년농업인 육성 조례
	주거	①청년주거 지원 조례
제주	일자리	①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②청년농업인 육성 조례
	복지문화	①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②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
	참여권리	①청년회 등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청년정책책임관을 지정하고, 청년정책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체계적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② (청년참여 기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네트워크(경기도 제외) 운영

- 17개 시·도 청년정책위원회(청년위원 406명, 전체위원의 41%)에서는 지자체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주요 청년정책들에 대해 논의
- 경기도를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청년들의 의견이 상시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청년네트워크(협의체)를 운영 중

<참고> 광역지자체 청년정책 거버넌스 구축·운영 현황(20.12월 기준)

구분	청년정책위원회		청년네트워크		청년조례	청년센터
	위원회 수(개)	청년위원수비율	협의체 수(개)	청년수(명)	제정현황(개)	센터수(개)
합계	17/17	166(40.9%)	16/17	2,703	17/17	37
서울	1	10(52.6%)	1	1,051	1	11
부산	1	9(45.0%)	1	234	1	4
대구	1	8(57.1%)	1	105	1	3
인천	1	10(50.0%)	1	49	1	2
광주	1	11(44.0%)	1	50	1	3
대전	1	12(42.9%)	1	131	1	4
울산	1	6(31.6%)	1	50	1	1
세종	1	9(32.1%)	1	40	1	1
경기	1	15(31.9%)	0	0	1	-
강원	1	6(33.3%)	1	49	1	-
충북	1	10(50.0%)	1	76	1	1
충남	1	7(36.8%)	1	118	1	-
전북	1	7(53.8%)	1	93	1	1
전남	1	20(52.6%)	1	71	1	1
경북	1	7(35.0%)	1	405	1	-
경남	1	8(40.0%)	1	94	1	2
제주	1	13(52.0%)	1	87	1	5

③ (소통·홍보) 청년 소통을 위한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운영 중

- 청년주간, 청년희망 공감토크 등 청년과의 소통 강화
 - * (광주) 청년주간, (대구) 청년희망공감토크, (대전) 대전넷, (울산) 울청넷
(세종) 청년주간, (강원) 청년정책자문단, (충북) 청년광장, (전북) 청년정책포럼단,
(전남) 청년의 목소리 (경북) 경북 청년의 날 (경남) 청년온나
- 청년에게 확산력 높은 매체 활용, 청년 참여형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청년 맞춤형 홍보 강화
 - * (부산) 청년체감형 청년 행복박스 제작 배부, (서울) 서울청년포털 (인천) 청년플랫폼
(경기) 경기청년포털 (충남) 다이나믹 충남청년 플랫폼 (제주) 청년 서포터즈

Ⅲ. 시행계획 추진과제 개요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중앙부처·지자체) 총괄 >

-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으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70개 과제)에 따른 청년정책이 확대·구체화되고, 중앙·지방 상호협력·보완 강화
- ⇒ 정책 사각지대 감소 + 지역 청년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

구분	중앙정부	광역시·도	계
과제(개)	308	1,258	정책 308 사업 1,258
예산(조원)	23.8	2.2	26.0

□ '21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주요 추진 과제

분야	'21년 주요 추진 과제
일자리	▶ (서울특별시)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원(171,000명, 868억원)
	▶ (광주광역시) 광주 청년 일경험 드림 (1,170명, 100억원)
	▶ (경기도) 청년혁신 창업기업 특례 지원(600개 기업, 400억원)
	▶ (전라남도)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 (1,054명, 50억원)
	▶ (울산광역시) 청년 CEO 육성 사업 (40명지원, 30명 창업, 10억원)
주거	▶ (경상남도) 맞춤형 청년주택 지원사업(20호, 20억원)
	▶ (부산광역시) 청년 월세지원 사업(3,000명, 30억원)
	▶ (충청북도) 대학생 주거지원 (서울·청주, 6.8억원)
	▶ (인천광역시) 취·창업 재직청년 청년 월세 지원 사업(400명, 5억원)
교육	▶ (대구광역시) 대경혁신인재양성 프로젝트 (HuStar) (455명, 125억원)
	▶ (전라북도) 특성화고 명장육성사업 (17개교, 6억)
	▶ (강원도) 인재육성장학금 지원(4,340명, 13억)
문화	▶ (대전광역시) 청년 희망통장 지원(500명, 32억원)
	▶ (경상북도) 가정위탁 보호종결 아동 자립정착금 지원(120명, 6억원)
	▶ (충청남도) 청년 문화예술가 육성 (22명·53개단체, 18억원)
참여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 청년센터 설립 및 청년공감회관 조성 (5,000명, 5억원)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청년센터 운영 (2,400명, 12억원)
	▶ (경상남도) 청년참여형 주민참여 예산제 (10억원)

1

추진과제 개요

※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발표한 청년정책 중 저출산 대책 일부는 중앙정부에서 총괄관리하는 지자체 청년정책에는 미포함

□ (총괄) 17개 광역지자체 청년정책 과제수(공동+자체사업)는 총 1,258개, 예산은 총 3조 1,550억원(시·도비는 2조 1,654억원)

○ 국비매칭으로 추진하는 공동사업이 450개, 1조 6,747억원(시도비 6,851억원), 광역시·도비로 추진하는 자체사업은 808개, 1조 4,803억원

지자체 청년정책 총괄(공동+자체사업)

구 분	전 체	일자리	주 거	교 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예산(억원)	31,550	12,958	9,614	2,626	5,536	816
▶ 공동사업 (시·도비)	16,747 (6,851)	6,361 (2,910)	6,758 (2,500)	1,591 (396)	1,871 (959)	166 (86)
▶ 자체사업	14,803	6,597	2,856	1,035	3,665	650
과제(개)	1,258	549	84	216	228	181
▶ 공동사업	450	242	29	71	83	25
▶ 자체사업	808	307	55	145	145	156

○ 지자체별로 과제수 기준으로 경북(148개), 경남(131개), 전남(94개) 順, 예산 기준으로 서울(7,079억원), 경기(4,511억원), 전남(2,916억원) 順

지자체별 청년정책 사업수(개) 및 총사업예산(억원)

구 분	청년인구 (20만 천명)	과 제 수			예 산		
		합계	공동	자체	합계	국비	순시도비
전 체	10,399	1,258	450	808	31,550	9,896	21,654
서울	2,168	59	8	51	7,079	1,137	5,942
부산	655	73	14	59	825	328	497
대구	484	71	29	42	911	368	543
인천	619	45	18	27	817	418	399
광주	310	68	28	40	1,650	1,150	500
대전	321	50	17	33	1,804	872	932
울산	225	64	22	42	585	113	472
세종	67	33	17	16	220	71	149
경기	2,819	42	8	34	4,511	451	4,060
강원	272	44	21	23	531	244	287
충북	305	82	32	50	1,219	302	917
충남	386	74	30	44	989	488	501
전북	315	92	45	47	2,628	754	1,874
전남	301	94	26	68	2,916	1,046	1,870
경북	440	148	61	87	2,659	1,103	1,556
경남	586	131	46	85	1,586	741	845
제주	126	88	28	60	620	310	310

◇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청년정책 마련 및 신속 집행

1 (코로나 극복 추가지원)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된 청년들을 위한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청년 역량 향상 및 교육비 지원 강화

○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및 일경험 지원 등 청년 일자리 지원

▶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1,000개의 꿈 추진」 (100억원, 신규)

신산업분야 200여개 기업 발굴, 청년 600명 매칭 및 전문역량형성 프로그램 지원, 서울시 생활임금(시급 10,702원) 적용, 7개월간 인건비 지원

▶ (인천광역시) 「인천 스마트혁신기업 청년일자리 사업」 (21억원, 신규)

코로나19로 인한 청년 취업난 가중에 따라 청년취업 지원을 위한 교육·훈련 및 일경험 제공, 4차 산업분야 기업에 청년 일자리 지원

▶ (경상남도) 「경남365 디딤돌 청년인턴」 (27.4억원, 신규)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취업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경남 365 디딤돌 청년인턴제 88명 채용 추진

○ 취업장려금·직업훈련, 취·창업 멘토링 등 청년 취업지원 강화

▶ (서울특별시)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원」 (868억원, 신규)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 청년(19~34세) 171천명에게 50만원의 취업장려금 지급

▶ (대구광역시) 「대구청년 취업응원카드」 (30억원)

대구에 주소를 둔 고등·대학교 졸업예정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미취업 청년 1.5만명에게 20만원 지원

▶ (충청북도) 「사회초년생 레벨업 지원」 및 「취·창업 멘토링 프로그램」 (0.7억원, 신규)

포스트 코로나 대응 재직청년들의 역량 강화를 통한 조기정착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직무교육 등 실시, 창업자를 위한 멘토링 지원

▶ (대구광역시) 「고졸청년-중소기업 디지털 Pre-허그 사업」 (45억원, 신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직업계고 졸업자를 디지털·비대면 분야 전문인력으로 육성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업(業)토링 지원사업」 (0.5억원, 신규)

코로나19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청년들이 자신의 삶과 일에 대한 탐구와 전문가 멘토링을 통해 비대면 분야 창업 지원

○ 장학금 등 청년·대학생 교육비 지원 강화

▶ (서울특별시) 「희망플러스 장학금」 (4.3억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로 학업과 취업난의 이중고를 겪는 대학 졸업 예정자의 학업과 취업 역량을 제고하도록 장학금 지원

② 공공부문 청년사업 조기집행

○ 청년사업 재정 조기집행을 통한 청년들의 경제난 완화 추진

▶ (경기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519억원)

청년의 사회활동 촉진, 사회적 기본권 실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청년기본소득을 조기 지급(분기별 분할 지급 → 1년치 일괄 지급)

▶ (대구광역시) 「공공근로(청년디딤돌) 사업」 (100억원)

공공일자리를 통한 청년 경력형성으로 민간취업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청년 디딤돌 사업을 4월 중 집행 완료 추진

③ 청년 마음 건강관리 지원

○ 장기화 된 코로나 시대에 청년의 마음건강 관리를 위한 심리상담, 치료비 지원 및 진로 설계 지원

▶ (서울특별시) 「청년마음건강 지원」 (20억원)

1:1 심층상담(연간 2천명), 예방적 차원에서 청년 마음건강 지원을 통한 청년의 생활건강 증진 및 사회진입 활성화

▶ (대구광역시) 「청년생활 종합상담사업」 (2억원)

청년 대상 진로토크 10회, 코로나19 집단상담, 심리.진로탐색 상담 등

▶ (경기도) 「청년층 정신건강 서비스 강화」 (52억원)

청년 마인드케어 사업을 통해 정신건강 관련 외료치료비(연36만원) 지원, 청년층 정신건강 전담인력배치 및 정신건강 상담 실시

▶ (경상북도) 「청년발전소 운영」 (2.5억원, 신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청년의 코로나블루 심리상담, 진로설계 코칭, 청년주도형 교육활동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마인드풀 교육 지원사업」 (0.5억원, 신규)

코로나 블루 등 청년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정신적, 신체적, 심리적 스트레스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신건강 교육 실시

(1) 일자리 분야

① (청년 일자리 확대) 청년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고용지원금·취업활동비 지원, 다양한 일경험 기회 제공

○ 고용지원금, 근속장려금 등을 통하여 민간·중소기업의 청년채용 유도

▶ (전라남도)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 (50억원)

중소기업에서 청년들을 현장 실무체험 후 정규직 전환 유도(1,054명)

▶ (경상북도)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12억원)

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미취업청년 등 대상으로 중소기업 고용지원금(150만원×2月) 및 근속장려금(150만원×2月) 최대 600만원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사업」 (21억원)

중소기업에서 청년 정규직 채용시 인건비 일부 지원, 취업여건 개선 및 구인·경영 애로 해소 및 일자리 미스매치와 청년 취업문제 해결(월50~70만원 인건비 지원)

▶ (울산광역시) 「주력산업에 주력하는 청년일자리 사업」 (5억원)

중소기업 청년 신규채용 인건비지원으로 지역 정착지원 및 주력산업 안정화(38명채용)

▶ (경상남도) 「경남 청년친화기업 선정 지원」 (7억원)

기업에 근무환경개선, 육아휴직 대체인력, 고용장려금 지원, 근로자에게 주거안정비 지원

▶ (전라북도) 「전북형 청년취업지원」 (14.8억원)

민간기업에서 청년들을 현장 실무체험 후 정규직 전환 유도(190명)

○ 취업활동비 지원, 일경험 기회 확대로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

▶ (대전광역시) 「대전 청년취업희망카드」 (82.6억원)

미취업청년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구직활동지원금 최대 300만원(50만원 × 6月) 지원

▶ (부산광역시) 「청년 사회진입 활동비」 (31.8억원)

미취업 청년에게 1인 최대 300만원(50만원*6개월)까지 취창업 활동비 지원

▶ (광주광역시) 「광주 청년 일경험 드림」 (100억원)

미취업 청년들에게 다양한 일경험을 통한 고용시장 진입과 자립 촉진

▶ (경상남도) 「청년 소셜마케터 양성지원」 (2억원, 신규)

청년 소셜마케터 양성 교육 후 사회적경제기업에 고용 매칭(10명)

▶ (세종특별자치시) 「청년 행정인턴 사업 운영」(0.9억원)

청년에게 동·하계(1~2월, 7~8월) 행정경험 및 시정이해 기회제공을 위한 인턴 채용

▶ (강원도)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 (12.6억원, 400명)

1인 최대 300만원(50만원*6개월) 구직활동비 지원, 수급중 취업하여 3개월간 근속시 취업성공금 50만원 지원

▶ (전라북도) 「대학생 직무인턴 운영」 (8.5억원)

대학생 취업역량강화 및 진로탐색 기회 제공(260명)

○ 상대적으로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 재직청년 복리후생·근로여건 개선 지원

- ▶ (경상북도)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 사업」 (14억원)
도내 중소기업에 근무중인 청년의 복지향상 및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건강관리·여가·자기계발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연 100만원) 지급
- ▶ (인천광역시) 「청년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 개선지원」 (10억원)
청년고용 우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근로환경 개선비용을 개소당 최대 4천만원 지원
- ▶ (울산광역시) 「울산청년 행복지원사업」 (5.1억원)
중소기업 신입 근로자의 임금격차 해소 및 건강관리, 자기계발, 문화활동 등 복지 지원을 위해 기준소득 150%이하 청년에게 연간 1백만원 지원(50만원*2회)
- ▶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647억원)
중소기업 등 재직 청년 노동자 임금, 복리후생 등 지원 ① 지원대상 확대(5,000명 → 9,000명), ② 업종제한 폐지(중소제조업 → 중소기업 재직 청년 노동자)

○ 그린분야 일자리 창출 및 교육·훈련 지원 강화

- ▶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1000개의 꿈」 (100.7억원)
디지털·그린뉴딜 등 신산업 분야 200여개 기업을 선정하여 청년을 매칭 → 청년 전문역량 형성 프로그램 지원, 참여청년에게 인건비(7개월) 지원
- ▶ (대구광역시) 「Hustar(디지털 그린 뉴딜 전문인력) 채용지원」 (16.4억원)
디지털·그린 뉴딜 관련 분야 HuStar 혁신아카데미 교육과정 수료(예정)자인 혁신 인재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 지원, 직무교육 및 컨설팅 제공
- ▶ (전라남도) 「그린뉴딜 G.P.S. 프로젝트」 (30.3억원)
녹색전환 기술산업 해양바이오 산업 분야 서비스 융합형 인력 양성, 기업 혁신체계 구축 지원

② (청년 창업 활성화) 창업 초기 단계 사업화 자금·기술, 금융, 공간 등 전방위 지원 강화, 분야별 창업가 양성 등 추진

○ 예비창업자에게 창업 초기자금, 청년창업카드 등 제공

- ▶ (광주광역시) 「세대별 맞춤형 예비창업자 발굴·육성」 (10억원)
기술과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창업자를 발굴하여 창업 초기자금 지원 및 기술·사업화 집중 지원을 통해 창업기업의 생존율·성장률 제고 및 일자리 창출
- ▶ (대구광역시) 「C-seed 청년 스타트업 육성사업」 (5억원)
예비창업자에게 초기 사업화자금 및 입주공간 제공(20명)
- ▶ (대전광역시) 「청년창업카드 지원」 (10.1억원)
청년창업가들이 제품 홍보비, 교통비, 식비 등으로 활용 가능한 카드 지급(290명)
- ▶ (인천광역시) 「청년창업 챌린지 지원사업」 (0.8억원)
청년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맞춤형 사업화자금 및 전문가 교육비 등 지원(6팀)

○ 지역 공유재산 등을 활용한 창업공간 제공 등 창업 지원

- ▶ (충청남도) 「지역마을 창고활용 청년창업가 양성사업」 (3억원)
지역 내 농협창고 리모델링 → 지역특성 반영한 창업공간 조성, 청년창업가 지원
- ▶ (광주광역시) 「공유재산 활용 청년창업지원」 (2.5억원)
광주시민회관 등 공유재산을 활용하여 청년창업 지원(10개팀)

○ 기술창업 인큐베이팅, 청년 창업기업 융자 및 특례 보증 등 금융지원, 창업 멘토링 등 창업 전단계 원스톱 지원

- ▶ (경상북도) 「청년창업 지역정착 지원사업」 (16.6억원)
미취업 청년의 지역 내 정착 유도를 위해 사업화자금, 정착활동비, 컨설팅 및 네트워킹 등 지원(1인당 0.2억원 × 64명)
- ▶ (부산광역시) 「기술창업 인큐베이팅 사업」 (10.4억원)
성장가능성이 높은 예비창업 또는 창업 초기단계의 기술기반 창업기업의 인큐베이팅 지원을 통해 지속성장 가능한 기업으로 육성
- ▶ (울산광역시) 「청년 CEO 육성 사업」 (10억원)
지역 청년창업자를 발굴하여 창업기회를 제공하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 (40명 지원, 30명 창업 목표)
- ▶ (경상남도) 「(김해시)장유도가 창의마켓 조성사업」 (20억원)
창의마켓 건물을 조성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 및 창업멘토링 및 창업지원(5개팀)
- ▶ (경기도) 「청년혁신 창업기업 특례지원」(400억원)
도내 청년 혁신형 창업 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기업 당 5억원 이내 융자, 최대 5억원 한도 특례보증 등)
- ▶ (인천광역시) 「청년창업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10억원)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의 금융지원(320명)

○ 소셜마케터, 요식업, 농업 등 분야별 창업 지원

- ▶ (경상남도) 「청년 소셜마케터 양성지원」 (2억원, 신규)
청년 소셜마케터 양성 교육 후 사회적경제 기업에 고용 매칭(10명)
- ▶ (서울특별시) 「청년 쿡 비즈니스 센터」 (13.3억원)
청년실업을 해소할 수 있는 지역 상권 기반형 요식업 창업 원스톱 지원(오픈키친, 푸드테스팅 공간 등) 플랫폼 제공
- ▶ (전라남도) 「학사 농업인 육성 지원사업」 (120억원)
대학을 졸업한 농업경영인의 영농기반 조성과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정착 도모
- ▶ (강원도) 농업인력육성 영농정착금 지원 (7.2억원)
청년 농업인(귀농·승계농 86명)을 선발하여 영농정착금 지원(1년차 월 80만원, 2년차 월 50만원)

③ (일터안전망 강화 등) 노동상담 및 근로법규 교육을 통하여 일터 안전망을 강화하고, 지방 공공기관 채용 과정에서의 공정성 확대

- ▶ (대구광역시) 「대구청년 알바돌봄 사업」 (0.5억원)
알바 청년, 고용주 등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근로법규 교육 실시(500명)
- ▶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통합채용」 (3억원)
공개경쟁·공정채용을 위해 31개 공공기관 대상 통합 채용채용 수립 및 필기시험 추진

[2] 주거 분야

① (주택공급 확대) 청년주택 및 대학생 기숙사 공급

○ 청년 친화적 세어하우스, 맞춤형 청년 주택 공급 확대

- ▶ (경상북도) 「이웃사촌 시범마을 청년 주거공간 조성」 (8.8억원)
청년의 안정적 주거기반 마련을 위한 청년행복주택(49호), 임대주택(21호) 등 청년 주거공간 총 70호 건립 및 제공
- ▶ (경상남도) 「맞춤형 청년주택 지원사업」 (20억원)
유휴공공시설 리모델링 및 임대주택 매입, 신축을 통해 지역 청년이 필요로 하는 수요 맞춤형 주거공간 조성('21년 신규 1개소, 20호 추진)
- ▶ (충청남도) 「지역사회 청년 세어하우스 운영」 (0.9억원)
기존 건물을 임대·리모델링하여 청년들이 거주할 수 있는 세어하우스 제공
-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형 세어하우스 청년임대주택 공급」 (0.2억원)
주거여건이 취약한 청년에게 주변 시세보다 50~70%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 및 운영하여 청년 주거복지 향상('21년 한국영상대·고려대·홍익대 인근 청년매입임대주택 45호 추가 공급 예정)
- ▶ (전라북도) 「귀농인 임시거주시설 조성」 (6.2억원)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장·단기 거주할 수 있는 임시 거처 조성·제공

○ 지역 소재 대학 재학생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생 기숙사 공급

- ▶ (충청북도) 「대학생 주거지원(동·서 서울관, 청주관)」 (6.8억원)
충북지역에 거주하는 대학교 신입생, 재학생을 위해, 서울·청주 기숙시설의 관리 및 운영
- ▶ (전라남도) 「전남학숙 운영」 (16.5억원)
광주 및 인근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에게 숙식 제공

② (주거서비스 지원) 다양한 주거 정보 제공, 주거 정책 교육 등 청년을 위한 주거 지원 서비스 제공

- ▶ (광주광역시) 「광주청년 주거서비스 지원」('21년 추경으로 반영, 하반기 추진예정)
청년이 거주하면서 커뮤니티, 창업준비를 함께 할 수 있는 청년주거사업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광주형 공유공간 모델 정립
- ▶ (경상남도) 「맞춤형 주거지원 플랫폼 구축·운영」 (0.8억원, 신규)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주거정보 관리시스템 신규 구축
- ▶ (대전광역시) 「청년 주거정책 교육」 (0.15억원)
청년들에게 주택 임대차 상식 및 대출제도 등 교육 기회 제공

③ (주거비용 경감) 청년 전월세 비용 지원, 청년 근로자 주거비 지원 등을 통한 청년의 안정적 지역 정주 유도

- 중앙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월세 대출 확대, 대출금리 인하 정책을 보완하여 지역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

광역 시도 및 기초 지자체 청년월세 지원사업 현황

지자체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 (백만원)
서울	청년 월세 지원사업	5천명, 월 20만원, 10개월	10,490
서울 성동구	성동 한양상생학사	한양대·한양여대 재학생, 월 15만원, 12개월	63
부산	청년 월세 지원사업	3천명, 월 10만원, 10개월	3,000
광주	광주형 일자리 근로자 주거비 지원	연간 실 주거비용 지원	500
인천	취·창업 재직청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4백명, 월 10만원, 8개월	500
울산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75명, 전월세보증금 이자 연 113만원, 9개월	75
경기 수원시	청년 월세 지원	100명, 월 10만원, 5개월	50
경기 성남시	지역상생형 대학생 반값원룸사업	가천대생 50명, 월세 반값지원, 12개월	60
경기 안양시	청년 월세 지원	75명, 월 20만원, 10개월	150
경기 평택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50명, 월 20만원, 12개월	75
충북 옥천군	청년월세지원	30명, 월 10만원, 최대24개월	36
충남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지원	500명, 연 150만원내, 24개월	465
충남 서천군	청년행복 주거비 지원사업	204명, 월 29만원, 24개월	620
전북 진안군	청년 주거비용 지원사업	30명, 월 15만원, 12개월 (추경편성 예정, 대상자 확대 추진)	54
전남	청년취업자 전월세 지원	500명, 월 10만원, 12개월	600
전남 곡성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	21명, 월 10만원, 12개월	26
전남 강진군	강진품에 청년 주거비 지원	10명, 월 10만원, 12개월	12
경북	청년근로자 주거비 지원사업	30명, 월 30만원내, 10개월	100
경남	청년 월세 지원사업	1,333명, 월 15만원, 10개월	2,000
제주	사회초연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105가구, 연 21만원내, 12개월	21

* 기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 경기 안양시, 성남시, 군포시, 충남 보령시, 서산시, 예산군, 전북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3) 교육 분야

① (교육기회 보장) 청년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인재 육성 장학금 지원

○ 대학생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이자(대전·충남의 경우 원금도 일부 지원)를 지원

- 서울, 부산, 경남, 제주 등 8개 지자체는 신용회복 지원도 병행

광역지자체 학자금 대출이자 등 지원사업 현황('21년)

지자체	시작연도	예산 (백만원)	신용회복 지원여부	지자체	시작연도	예산 (백만원)	신용회복 지원여부
서울	2012년	1,425	○	경기	2010년	4,050	-
부산	2016년	460	○	강원	-	-	-
대구	2016년	350	○	충북	2018년	161	○
인천	2012년	210	-	충남	2019년	20	-
광주	2011년	180	○	전북	2016년	158	-
대전	2017년	250	○	전남	2019년	90	-
울산	2017년	80	-	경북	2017년	150	-
세종	2017년	30	-	경남	2013년	105	○
				제주	2011년	260	○

○ 인재 육성 장학금 지원

광역지자체 학자금 및 장학금 지원 사업 현황('21년)

지자체	장학금 종류	내 용	규모(백만원)
서울	등록금 지원 장학사업	▶ 저소득층 대학생 및 직업전문학교 등록금	4,008
	서울희망공익인재 장학금	▶ 학업장려금, 프로젝트 지원	289
	서울우수인재 장학금	▶ 저소득층 대학 전공분야 우수자 지원	415
	희망플러스 장학금	▶ 저소득 가정의 학업지속 지원	429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	▶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 지급	306
인천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장학	▶ 인천지역 우수학생 등록금	1,371
광주	빛고을 장학재단 장학금	▶ 광주지역 우수학생 등록금	135
울산	울산 우수인재 장학금	▶ 울산지역 우수학생 등록금	911
세종	세종청년장학사업	▶ 핵심인재육성사업, 디딤돌 장학금	659
경기	경기도민희회장학회 장학금	▶ 경기지역 취약계층 대학생 등록금	1,600
강원	강원인재육성재단지원	▶ 강원지역 대학생 장학금	3,779
충북	대학생 장학금 지원	▶ 충북지역 우수학생 장학금	940
충남	미래인재육성장학금	▶ 저소득층 우수인재 지원 장학금	1,420
전북	전라북도 인재육성 장학금	▶ 향토인재, 희망미래인재, 전북사랑 장학금지급	250
전남	인재육성장학금	▶ 지역사회 발전 기여 인재 장학금	1,145
경북	근로자자녀 학자금 지원	▶ 경북지역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금	200
경남	대학입(재)학생 장학금	▶ 경남지역 저소득층 학생 장학금	600

② (미래역량 강화) 분야별 맞춤형 인재양성 프로그램, 기술인력 교육 운영 등 통한 청년의 핵심 미래역량 강화 지원

- ▶ (충청북도) 「ICT이노베이션스퀘어 확산사업」 (3.75억원)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지역 거점(Hub) 구축 및 교육 공간을 운영하고, AI와 블록체인 교육과정 개설 및 교육수준 맞춤형 교육과정 설계, 과정별 교육 운영
- ▶ (부산광역시) NEXT10 (부산청년 사관 학교) 운영 (9억원, 신규)
부산의 혁신적 인재 발굴·육성 및 지역 산업 내 연계를 통해 청년의 지역 정착과 산업 경쟁력 향상의 선순환 구조 조성
- ▶ (울산광역시) 울산과학기술원 지역인재 전형 (10억원, 신규)
4차산업 융합기술의 핵심인 AI 및 IoT 등의 산업 맞춤형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한 인력 양성과 지역 우수 인재의 역외 유출방지에 기여(65명)
- ▶ (대구광역시) 「대경혁신인재양성 프로젝트(HuStar)」 (125억원)
혁신대학·혁신아카데미 사업단을 선정→로봇, 미래차 등 혁신분야 교육 지원(455명)
- ▶ (인천광역시) 「바이오공정 전문인력 양성」 (285억)
바이오 공정 실습장 구축 및 NIBRT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2,000명)
- ▶ (경상남도) 「청년 프로그래밍교육 지원」 (1.5억원, 신규)
4차산업혁명시대 핵심분야(코딩&프로그래밍) 교육과정 운영(75명)
- ▶ (전라남도) 「콘텐츠산업 청년 일자리창출 리쇼어링」 (57억원)
청년이 선호하는 분야인 애니메이션, 웹툰 등 전문인력 양성 및 콘텐츠기업 유치

③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청년 진로교육 강화, 일자리 연계형 맞춤형 교육 제공 등을 통한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 ▶ (경상북도) 「청년발전소 운영」 (2.5억원)
심리상담 및 진로설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청년의 심리적 안정과 건강한 삶 설계를 지원하고, 청년주도형 교육활동 지원으로 공동체 의식을 갖춘 청년인재 양성
- ▶ (서울특별시) 「청년 인생설계학교 운영」 (9.5억원)
인생전환기 청년의 주체적 경로설정 기회 제공 및 진로탐색 기회 마련
- ▶ (전라북도) 「특성화고 명장육성사업」 (6억)
지역산업과 연계한 특성화고 기술인력양성(17개교 669명)
- ▶ (광주광역시) 「광주형 일자리 맞춤형 직업교육」 (8억원)
직업계고 학생대상 광주형 일자리 맞춤형 프로그램 관련학과 운영비 지원 및 광주형 일자리 선도기업, 거점학교 기자재 확충비 지원 추진
- ▶ (제주특별자치도) 「산업협력형 지역인재 육성사업」 (2.7억원)
도-대학-기업이 협업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공동육성하여 청년들의 취업 역량 강화(기업요구 교육·인턴십·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 (경기도)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 (37억원)
기업수요 반영하여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전공과정 개발·운영하고 현장실습 실시
- ▶ (전라북도)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 양성」 (36억원)
현장중심의 융복합 산업인력 확보와 기업수요에 맞는 전문 인력양성으로 우수 인력 지역정착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4] 복지·문화 분야

① (자산형성 지원) 청년기본소득(경기), 청년 희망통장지원 등을 통한 사회출발기 청년의 소득 및 자산형성 지원

- ▶ (경기도)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1,519억원)
만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 정기소득 보조(연 100만원)
- ▶ (대전광역시) 「청년 희망통장 지원」 (32억원)
가구 중위소득 120% 청년 500명 대상, 3년간 청년-시 15만원씩 1:1매칭 적립
- ▶ (부산광역시) 「청년 희망날개 통장」 (16.5억)
저소득 근로청년층의 자활 기반을 조성하여 희망찬 미래 준비를 지원하도록 10만원 저축시 10만원(1:1매칭) 지원
- ▶ (대구광역시) 「청년희망적금」 (10.8억원)
240만원(본인 60, 대구시 180) 목돈마련 지원 → 부채예방 및 미래설계 지원(600명)
- ▶ (경기도) 「생애최초 국민연금 가입 지원」 (73억원, 신규)
국민연금 조기가입 유도를 위한 인식 강화 교육 및 홍보, 금융상품 설계 안내, 노후대비 재무설계 및 자산관리를 위한 기초교육 실시
- ▶ (전라북도) 「전북형 청년수당 지원」 (36억)
일하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 및 지역정착을 위한 수당 지원(1,000명)

② (건강 증진) 청년 정신건강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청년 건강 증진 지원

- ▶ (대전광역시) 「청년 마음건강 지원」 (2억원)
청년 마음건강을 위한 일대일 전문상담 지원, 집단 상담 프로그램 운영, 온라인 자가진단 서비스 제공 등
-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마인트풀 교육 지원사업」 (0.4억원, 신규)
코로나 블루 등 청년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정신적, 신체적, 심리적 스트레스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신건강 교육 실시
- ▶ (대구광역시) 「청년생활 종합상담사업」 (2억원)
심리건강 회복과 사회진입 지원을 위해 상담 및 청년정책 원스톱 서비스 제공(2천명)
- ▶ (전라북도) 「청년 건강검진 지원」 (0.3억원)
도내 저소득 청년층의 건강검진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건강 관리능력 향상 및 증진 도모(1,000명)

③ (취약계층 지원) 보호종료 청년 자립 지원금 지원, 이주 청년 지원사업, 장애청년 등 취약계층 청년의 사회정착 지원

- ▶ (경상남도)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12억원)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퇴소아동이 보호종료 시 자립정착금 5백만원 지급(242명)
- ▶ (경기도)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6.4억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을 5백만원('20) → 1천만원('21)으로 상향
- ▶ (경상북도) 「가정위탁 보호종결 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6억원)
가정위탁 보호종결 청년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자립정착금(1인 500만원) 지원
- ▶ (광주광역시)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0.4억원)
시설퇴소아동의 생활안정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정착에 필요경비 지원
- ▶ (서울특별시) 「청각장애 청년 1:1 문자통역 지원」 (1억원)
청년 청각장애인이 취업·직무·자기계발 등 의사소통 필요시 무상으로 문자통역사 현장 파견 지원
- ▶ (서울특별시) 「서울전입 청년 1인가구 웰컴박스 지원사업」 (3억원)
타지역에서 서울로 전입한 청년들에게 서울시 청년정책 및 지역 생활 정보 안내

④ (예술인 육성 및 문화생활 지원) 청년 예술인 육성·지원, 청년 문화향유 기회 확대 등 광범위한 청년 문화생활 지원 강화

- ▶ (충청남도) 「청년 문화예술가 육성(생애최초 및 신진예술창작 지원)」 (18억원)
청년예술가(생애최초, 22명) 및 신진예술가단체(53개) 사업비 지원
- ▶ (부산광역시) 「청년연출가 작품제작 지원」 (2.3억원)
쇼케이스 및 공연작품 제작지원 → 청년연출가 발굴·육성 및 지역대표 공연 콘텐츠 개발
- ▶ (인천광역시) 청년 문화창작소 조성·운영 (4억원)
유희공간을 활용하여 청년예술가를 위한 창작·전시·네트워킹 공간을 조성
-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문화 매개특성화사업」 (4.5억원)
청년예술가 및 기획자 등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의 장기적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속 가능한 제주형 청년문화사업 추진(창작지원금, 임대료, 행사비 지원등)
- ▶ (경상남도) 「도립연극단 청년연수단원제 추진」 (1.6억원)
도립연극단 청년연수단원제를 운영하여 연수 프로그램 및 공연 지원(7명)
- ▶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예술가 육성·지원」 (0.4억원)
지역 내의 유망한 청년 예술가를 발굴하여, 문화예술 창작활동에 집중하도록 지원하여 자립기반 마련
- ▶ (충청북도) 「찾아가는 청년문화 제공 프로그램」 (0.2억원, 신규)
청년들에게 청년작가 북 토크, 청년 문화예술인 강연, 음악 공연, 영화 상영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

(5) 참여·권리 분야

① (정책 주도성 강화) 청년참여형 예산, 청년참여 회의체 조성 등 청년의 정책 참여 강화

- ▶ (광주광역시) 「청년도시광주 TF운영」 (0.1억원)
청년관련 주요사업의 기본방향 수립 및 사업추진 과정 공유 → 직접 정책에 참여
- ▶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청년참여형 사업)」 (10억원)
지역대학, 취업연수생, 경남청년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청년사업 집중 발굴
- ▶ (경기도) 「경기청년지원사업단 운영」 (12억원)
대표성 있는 청년들의 참여, 소통, 숙의를 통한 청년정책 추진과제 도출
-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청년 원탁회의」 (0.67억원)
청년층 의견 수렴, 청년정책 발굴·제안, 청년 네트워크 형성 및 교류활동 지원
- ▶ (충청북도) 「제6기 충북청년광장」 (0.2억원)
청년의 청년정책 모니터링, 현장취재 및 조사·연구, 집단토론 등 정책참여 보장
- ▶ (전라북도) 「대학연계 지역사회 창의학교 운영」 (1.2억원)
대학생 팀 프로젝트 비용을 지원하고, 아이디어를 도정시책에 반영
- ▶ (전라남도) 「청년 소통 간담회 개최」 (0.2억원)
청년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고 아이디어·제안사항을 도정에 반영

② (청년 공간) 청년활동 지원공간 구축

- ▶ (인천광역시) 「인천 청년센터(청년공간) 추가 구축」 (15억원)
청년들의 휴식, 교류, 취창업 지원 공간인 유유기지 추가 구축(유유기지 3호점 동구 개소)
- ▶ (경상북도) 「청년행복 뉴딜 프로젝트」 (22억원)
다양한 청년 활동 지원공간 구축, 일자리 지원 등 청년정책 지원 프로그램 운영
-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청년센터 운영」 (12.3억원)
다양한 청년 활동지원, 청년정책 발굴, 청년단체 네트워킹, 청년종합정보 제공
- ▶ (경상남도) 「청년친화도시 조성」 (52억원)
청년활동 인프라 조성, 청년 친화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청년친화도시 조성(21년 밀양, 함양)
-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 청년센터 설립 및 청년공감회관 조성」 (5억원)
청년센터, 세종형 청년사업 확대 시행(20년대비 사업 확대(+4개), 신규사업 9개 개발)
- ▶ (충청남도) 청년활력공간 「청년 LAB」 조성 (2.6억원)
도내 지역 청년들의 커뮤니티 활동 및 역량강화 등을 목적으로 다목적 소통공간 마련

③ (청년 교류) 청년주간, 청년 네트워크 등 청년교류 활성화 지원

- ▶ (서울특별시) 「청년 교류 지원 사업」 (3.7억원)
서울-지역 청년단체의 인적·물적 협력을 통한 서울과 지역 청년의 기회 확대
- ▶ (강원도) 「청년네트워킹 지원」 (0.3억원)
청년정책자문단을 구성하여 워크숍 개최 및 네트워킹 운영
- ▶ (울산광역시) 「울산청년주간 운영」 (1억원, 신규)
청년정책·네트워킹 확산을 위한 콘퍼런스, 박람회, 전국청년 교류회, 문화공연 등)

① 주기적·체계적 점검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를 중심으로 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주기적(반기별) 점검 및 체계적 분석을 통해 이행상황을 철저히 관리
 - 특히, 직접 일자리, 자금 지원 사업은 코로나 상황 등을 고려해서 조기집행 될 수 있도록 점검·관리
- 지연과제의 경우 관계부처·지자체와 협의하여 제도개선 등 보완방안 마련

② 신규과제 발굴 추진

- 기존 과제를 성실 이행 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청년과 함께 새로운 기획을 통해 청년이 체감하고 주인공 되는 신규 과제 발굴 및 발표 추진

③ 시행계획 평가

-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하여 부처별 실행을 담보하고, 차년도 시행계획 반영 등 정책 대안 모색
- 평가시 청년들의 정책만족도 반영, 평가위원회 구성시 청년 포함 등을 통하여 청년관점에서 청년정책 성과 분석 추진

④ 청년 정책 거버넌스 구축 관련

- '21년 중앙·지방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연석회의(민간 중심), 중앙·지방 청년정책책임관협의회(정부 중심) 등 통해 **협업 강화**

정부-민간 Two-Track으로 청년정책 지역협력 체계 구축

▶ (정부) 중앙부처-광역지자체 **청년정책책임관 회의** 운영(분기별, '21~)

▶ (민간) 중앙-지방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연석회의*** 운영(반기별, '21~)

* 중앙-지자체 청년정책조정위원으로 구성, 연석회의를 통해 중앙-지자체 청년정책 공유, 지역의제 발굴, 청년정책 협력방안 마련 등 논의

2호 안건

정부위원회 청년참여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2021. 3. 30.

관계기관 합동

정부위원회 청년참여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추진배경 및 주요경과

- (VIP 지시) “청년의 주도적 국정참여 및 확실한 정책 체감방안 마련”(19.12.19)

“국정운영 전반에 청년 대표성을 높이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청년이 주도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튼튼히 뒷받침해 청년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줄 것”

- ‘정부위원회 청년참여 활성화 계획’ 발표(20.9월, 제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 (목표) ‘22년까지 총 152개 위원회, 340명 청년위원 위촉 추진

* (청년기본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20조)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해야 함

- (소속별 위원회) 대통령 17개, 국무총리 14개, 부처 104개, 시·도 17개 위원회

* 청년위촉 비율 △50% 이상 19개 △30% 이상 2개 △20% 이상 7개 △10% 이상 31개 △1명 이상 93개

【 위원회 소속별 현황 】

- ▲ (대통령 : 17개) 국가교육회의, 국가기후환경회의, 국가지식재산위, 국가건축정책위, 국가균형발전위, 경제사회노동위, 4차산업혁명위, 일자리위, 저출산·고령사회위 등
- ▲ (국무총리 : 14개) 국가산학협력위, 국가보훈위, 국제개발협력위, 녹색성장위,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위, 문화다양성위, 시민사회발전위, 양성평등위, 청년정책조정위 등
- ▲ (중앙부처 : 104개) 국가건강검진위, 국민연금심의위, 군인복지위, 동물복지위, 여성폭력방지위, 주거정책심의위, 학자금지원제도심의위, 창업지원정책협의회, 청년고용촉진특별위 등
- ▲ (시·도 : 17개)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 등 청년정책위

- (소속별 청년위원) 대통령 30명, 국무총리 36명, 부처 115명, 시·도 159명

□ 이행 실적(~21.1/4분기) 및 평가

- (위촉 현황) 총 45개 위원회, 청년위원 211명 위촉(21.3월 기준)

* (중앙) 28개 위원회 총 50명, (시·도) 17개 위원회 총 161명

* `20.9월 이후 민간위원 임기 만료 등 14개 위원회, 34명 추가 위촉

※ 청년위원 위촉 현황(중앙)

연번	위원회명	'22년 목표인원 (청년/위촉직)	'21.1사분기 청년위원 위촉현황(/위촉직)	비고 (20.9월 대비)
1	청년정책조정위원회	12명/20명	12명/20명	신규12
2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5명/10명	5명/10명	추가3 (기존2)
3	양성평등위원회	2명/10명	1명/10명	-
4	국가보훈위원회	4명/20명	2명/20명	-
5	학자금지원제도심의위원회	1명/5명	1명/5명	신규1
6	창업지원정책협의회	2명/6명	2명/6명	신규2
7	국가교육회의	2명/12명	2명/12명	신규2
8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명/16명	1명/16명	-
9	경제사회노동위원회	1명/10명	1명/10명	-
10	4차산업혁명위원회	2명/20명	1명/20명	-
11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2명/13명	2명/13명	신규2
12	문화다양성위원회	1명/10명	1명/10명	신규1
13	시민사회발전위원회	3명/26명	3명/26명	신규3
14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위원회	1명/9명	1명/9명	신규1
15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	2명/17명	1명/17명	신규1
16	외국인정책위원회	1명/9명	1명/9명	-
17	중앙보육정책위원회	2명/16명	1명/16명	-
18	청소년정책위원회	2명/13명	2명/13명	-
19	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	1명/10명	1명/10명	신규1
20	녹색성장위원회	2명/25명	1명/25명	-
21	국제개발협력위원회	1명/12명	1명/12명	신규1
22	고용정책심의회	1명/19명	1명/19명	신규1
23	여성농업인정책자문회의	1명/14명	1명/14명	-
24	갈등관리심의위원회(교육부)	23명/160명	1명/160명(각 부처)	-
25~28	적극행정위원회(4개) (국방부,문체부,여가부,문화재청)	45명/338명	4명/338명(각 부처)	추가3 (기존1)
소계			50명	34명

* 청년위원 참여목표 수는 340명으로, 미위촉 129명은 민간위원 임기만료 시 순차 위촉 추진(~22년)

□ 향후 계획

-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청년참여 20-30’*을 반영한 ‘청년참여 위원회 추가 확대방안’ 수립(7월)

- 부처별, 지자체별 세부 추진계획 포함

* '25년까지 청년참여 정부위원회 30%, 청년참여위원회 청년위원 위촉비율 20%

구분		'20	'21	'22	'23	'24	'25
청년참여 위원회 비율(%)	중앙부처	13.9%	17.1%	20.3%	23.6%	26.8%	30% 이상
	광역지자체	0.6%	6.5%	12.4%	18.2%	24.1%	30% 이상

- 정부위원회 청년 참여를 위한 청년인재 지속 발굴 및 DB 구축('21.하)
- 부처별·지자체별 추진상황 분기별 점검 및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보고

□ 협조 요청사항

- 민간위원 임기 만료 시 소관위원회 청년위원 위촉
 - 청년위원 위촉 및 안건제안 등 실적 국조실 통보(분기별)
- 분야별(소속기관 포함) 청년인재 적극 추천(수시)
 - * 청년인재 기준안은 국가인재DB의 '공직후보자'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향후 다양한 의견수렴 및 종합검토를 통해 기준 확정 예정

【 청년인재 기준(안) 】

- ▲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청년단체, 분야별 기관·협회·단체 등 추천자
- ▲ 청년단체·시설·기관 등에서 3년 이상 활동 및 근무자
- ▲ 시민단체 활동 등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경험 보유자
- ▲ 정부 및 지자체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
- ▲ 정부 및 지자체의 청년정책 관련 공모사업 등 수행자
- ▲ 주요협회·단체의 중간관리자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 ▲ 청년권익증진 관련 창작 및 사회활동자로서 청년발전 기여한 자
- ▲ 인문사회·과학기술 등 각 분야 연구기관의 부연구원급 이상,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 ▲ 문화·예술·체육·과학·사회 등 분야 국내외 주요대회 입상자, 훈포장·대통령·장관표창 수여자
- ▲ 변호사·의사·건축사·공인회계사·공인노무사 등 분야별 전문자격증 소지자
- ▲ 사회 각 분야에서 뚜렷한 업적이나 성과를 거두어 국가의 위상제고에 기여한 자
- ▲ 기타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붙임】** 청년위촉대상 위원회 범위 및 청년위촉 비율 현황

붙임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위촉 현황

□ **대통령 및 중앙부처 : 135개 위원회**(대통령 소속 17개, 총리소속 14개, 부처 소속 104개)

	위원회(소속단위)	청년위촉 비율	위촉직 위원	청년위원 목표	청년위원 현원(%)	달성여부	주관부처
1	청년정책조정위원회(국무총리)	50% 이상	20	12	12(100%)	○	국조실
2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고용부)		10	5	5(100%)	○	고용부
3	등록금심의위원회(교육부, 각 대학별 구성)	30% 이상	7인 이상	3인 이상	-	-	교육부
4	군인복지위원회(국방부)		3	1	-	-	국방부
5	미세먼지문제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대통령)	20% 이상	22	5	-	-	환경부
6	양성평등위원회(국무총리)		10	2	1(50%)	-	여가부
7	국가보훈위원회(국무총리)		20	4	2(50%)	-	국가보훈처
8	학자금지원제도심의위원회(교육부)		5	1	1(100%)	○	교육부
9	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국방부)		5	1	-	-	국방부
10	자살예방정책위원회(복지부)		10	2	-	-	복지부
11	창업지원정책협의회(중기부)		6	2	2(100%)	○	중기부
12	국가교육회의(대통령)	10% 이상	12	2	2(100%)	○	교육부
13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대통령)		16	2	1(50%)	-	복지부
14	일자리위원회(대통령)		13	2	-	-	고용부
15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대통령)		20	2	-	-	농림부

	위원회(소속단위)	청년우족 비율	우족직 위원	청년위원 목표	청년위원 현원(%)	달성여부	주관부처
16	경제사회노동위원회(대통령)		10	1	1(100%)	○	고용부
17	4차산업혁명위원회(대통령)		20	2	1(50%)	-	과기부
18	국가균형발전위원회(대통령)		18	2	-	-	산업부
19	국가산학협력위원회(국무총리)		13	2	2(100%)	○	교육부
20	학교폭력대책위원회(국무총리)		8	1	-	-	교육부
21	소비자정책위원회(국무총리)		14	2	-	-	공정위
22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위원회(국무총리)		9	1	-	-	농림부
23	시민사회발전위원회(국무총리)		26	3	3(100%)	○	국조실
24	자원봉사진흥위원회(국무총리)		21	3	-	-	행안부
25	문화다양성위원회(국무총리)		10	1	1(100%)	○	문체부
26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국무총리)		6	1	-	-	여가부
27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교육부)		9	1	1(100%)	○	교육부
28	평생교육진흥위원회(교육부)		10	1	-	-	교육부
29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교육부)		17	2	1(50%)	-	교육부, 문체부
30	학습계좌자문위원회(교육부)		9	1	-	-	교육부
31	여성과학기술인육성위원회(과기부)		10	1	-	-	과기부
32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기재부)		9	1	-	-	기재부

	위원회(소속단위)	청년우족 비율	우족직 위원	청년위원 목표	청년위원 현원(%)	달성여부	주관부처
33	도시농업협의회(농림부)		8	1	-	-	농림부
34	공공디자인위원회(문체부)		10	1	-	-	문체부
35	외국인정책위원회(법무부)		9	1	1(100%)	<u>○</u>	법무부
36	국가건강검진위원회(복지부)		10	1	-	-	복지부
37	중앙보육정책위원회(복지부)		16	2	1(50%)	-	복지부
38	청소년정책위원회(여가부)		13	2	2(100%)	<u>○</u>	여가부
39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여가부)		10	1	-	-	여가부
40	가족친화인증위원회(여가부)		7	1	-	-	여가부
41	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중기부)		10	1	1(100%)	<u>○</u>	중기부
42	지속가능발전위원회(환경부)		26	3	-	-	환경부
43	정책기획위원회(대통령)	1명 이상	100	4	-	-	행안부
44	국민경제자문회의(대통령)		27	1	-	-	
45	국가건축정책위원회(대통령)		19	1	-	-	국토부
46	국가지식재산위원회(대통령)		22	1	-	-	과기부
47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대통령)		19	1	-	-	문체부
48	북방경제협력위원회(대통령)		19	1	-	-	기재부
49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대통령)		15	1	-	-	문체부
50	자치분권위원회(대통령)		24	1	-	-	행안부

	위원회(소속단위)	청년우족 비율	우족직 위원	청년위원 목표	청년위원 현원(%)	달성여부	주관부처
51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대통령)		13	1	-	-	복지부
52	녹색성장위원회(국무총리)		25	2	1(50%)	-	국조실
53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국무총리)		18	1	-	-	행안부
54	국제개발협력위원회(국무총리)		12	1	1(100%)	○	국조실
55	고용정책심의회(고용부)		17	1	1(100%)	○	고용부
56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고용부)		13	1	-	-	고용부
57	주거정책심의위원회(국토부)		11	1	-	-	국토부
58	동물복지위원회(농림부)		10	1	-	-	농림부
59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문체부)		13	1	-	-	문체부
60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문체부)		12	1	-	-	문체부
61	지역문화협력위원회(문체부)		14	1	-	-	문체부
62	국민연금심의위원회(복지부)		22	1	-	-	복지부
63	여성농업인정책자문회의(농림부)		14	1	1(100%)	○	농림부
64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행안부)		6	1	-	-	행안부
65	중앙환경정책조정위원회(환경부)		121	1	-	-	환경부
66	국가통계위원회(통계청)		16	1	-	-	통계청
67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농촌진흥청)		14	1	-	-	농촌진흥청
68	각 부처 갈등관리심의위원회(과기부 등 23개 부처)		160	23	1(4.35%)	-	23개부처
69	각 부처 적극행정위원회(국조실 등 45개 부처)		338	45	4(8.89%)	-	45개부처

청년고용대책

현장안착방안(집행계획 포함)

2021. 3. 30.

고용노동부

청년고용대책 현장안착방안(집행계획 포함)

1

추진경과

- (청년정책 기본계획) “청년구직자 지원을 위한 특단의 대책 추진”(20.12.23)
- (VIP) “청년들의 고용상황을 개선할 특단의 고용대책 마련 당부”(21.2.15)

“역대급 고용위기 국면에서 계획하고 예정했던 고용대책을 넘어서는 추가 대책을 비상한 각오로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들과 여성들의 고용상황을 개선할 특단의 고용대책도 신속하게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21.2.15)”

- (청년고용 대책) 청년채용 인센티브 강화, 능력개발 기회 확대, 맞춤형 고용지원 강화 등의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 발표(21.3.3.)

* 3.25(목) 추경안 국회 통과

2

추진 주요 내용

◆ '21년 총 5.8조원 투입, 101.8만명+ α * 청년 지원

* 인원(명) 기준 + 기업·지자체 지원 개소 등은 + α 에 포함

[당초] 「청년정책 기본계획」 등 기존 정책(4.4조원, 79.4만명+ α)을 통해 일자리 창출·청년 고용지원 지속 추진

[추가]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참여 확대 등 +1.4조원, +22.4만명+ α

1 청년이 취업할 수 있는 더 많은 일자리 창출(청년일자리 +12.9만명)

1 민간 일자리 창출기반 강화(+10.2만명)

- 디지털 분야 일자리창출*(+6만명, +5,611억원),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2만명, +1,200억원) 등 청년 채용 인센티브 강화

* 중소·중견기업이 IT직무에 청년 채용시 인건비 지원(월 최대 180만원, 최대 6개월)

** 중소기업 사업주가 6개월이상 청년 채용시 인건비 지원(월 최대 100만원, 최대 6개월)

- 디지털·비대면, 바이오, 문화·체육 등 분야별 전문인력 채용 지원(+2.1만명)

* ▲대학 비대면 교수학습 개발 지원(0.3만명) ▲바이오 데이터 엔지니어 양성(0.1만명) 등

- 비대면 청년창업 프로그램 확대(+0.12만명, +300억원)하고, 정부-글로벌 기업 협업을 통한 창업기업 발굴 및 해외진출 지원('21년 200개사)

② 공공부문 마중물 역할 강화(+2.7만명)

-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연장('21→'23년)을 추진하고, 공공분야 체험형 일자리를 신속 채용(2.2만명 중 1분기내 4,200명)
- 디지털·그린, 생활방역·안전 일자리 등 청년 직접 일자리창출(+2.7만명)
 - * 온라인 튜터(0.4만명), ▲시설분야 넷제로 기초DB 구축(200명) ▲학교 방역인력(1만명) 등

② 코로나 위기를 능력개발로 극복 (+2.3만명)

① 미래선도 인력양성(+2.3만명)

- 디지털·신기술, 그린 분야 **K-Digital Training** 확대(+0.3만명, 1.7→2만명)
- 직업훈련에 참여한 인문계·비전공 청년 등에 디지털 초·중급 훈련, 인문소양 교육 등 지원, 인원 확대(K-Digital Credit, +2만명)
- 폴리텍 신산업 비중 확대 등을 추진하고, 신기술 분야의 범부처 인적자본 개발 투자 확대(관계부처 협업예산 편성*, '21.7월~)

* 신기술 분야별 초·중·고급 수준별 인력양성 트랙 구축, 트랙간 연계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HRD-Net을 통해 연계정보 제공

② 청년친화 직업훈련 확충

- 항공·관광 등 고용위기업종 종사자·전공자 대상 맞춤형 훈련을 제공하고, 실업자 대상 100% 비대면 훈련 방식을 단계적 도입*
 - * ① 기초디지털 직무훈련(K-digital Credit)을 100% 원격 제공('21.上)
 - ② K-Digital Training부터 상호작용 포함된 100% 원격훈련 허용('21.下)
 - ③ 서비스·뿌리 분야의 상호작용형 원격훈련 시범사업 추진('21.下)
- 대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추진 등 기업 주도 훈련모델(삼성 SSAFY 등) 확산

③ 구직청년에 대한 맞춤형 고용지원 강화 (+7.2만명)

① (저소득 취약청년) 소득·일경험·취업지원 확대(+5.9만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특례(I 유형 +5만명)와 일경험 프로그램(청년층 +0.9만명) 확대하여 청년의 취업의욕 고취

② (구직단념청년) 노동시장 밖 청년 지원 사각지대 해소(+0.5만명)

- 지자체 청년센터를 통한 '청년 발굴-맞춤형 상담-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프로그램(가칭) 청년 도전 지원사업) 신설(+5천명, +65억원)
- 미취업 청년 조기 발굴 및 구직지원 등을 위한 정보 연계 강화
 - * 교육부와외의 졸업생 정보 공유 등을 위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 개정 추진

③ (고졸 미취업) 지역기업, 공공기관 등에의 취업지원 강화(+0.8만명)

- 지자체-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맞춤형 훈련 및 지역기업 취업연계 확대(+200억원)하고, 공공기관 고졸채용 확대를 위한 평가방식 개선*
 - * (현행) 고졸 채용 관련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항목 총 2~3점 비계량 평가
→ (개선) 계량지표 신설

4 지속가능한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기반 구축

① 한국판 뉴딜을 통한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일자리창출 지속 추진

② 대학일자리센터 지원대상 확대 등 기능 확대·개편*, 기업 채용관련 정보의 신속한 제공 시스템 마련** 등 취업지원 인프라 보강

* (대상) 재학생 → 졸업후 2년내 미취업자 추가/(기능) 진로취업지원 → 생활심리 상담 등 추가

** 기업의 신규인력 채용동향 조사(약 500개)를 통해 기업이 원하는 인력수요, 직무 등을 제공(올해 시범 운영)

3 향후 집행계획

1 추진상황 점검

-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고용위기 대응반」*을 통해 정기적으로 실적을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고용부)
 - * 고용노동부 장관(반장), 기재부·교육부·과기부·행안부·문체부 등 관련부처 차관
- 특히, 추경을 통해 신설되는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주기적 점검을 통해 조기 집행 독려
- 청년 일자리 창출 관련 규제완화·투자확대 등에 대해서도 지속 점검(기재부, 한국판 뉴딜 점검 TF,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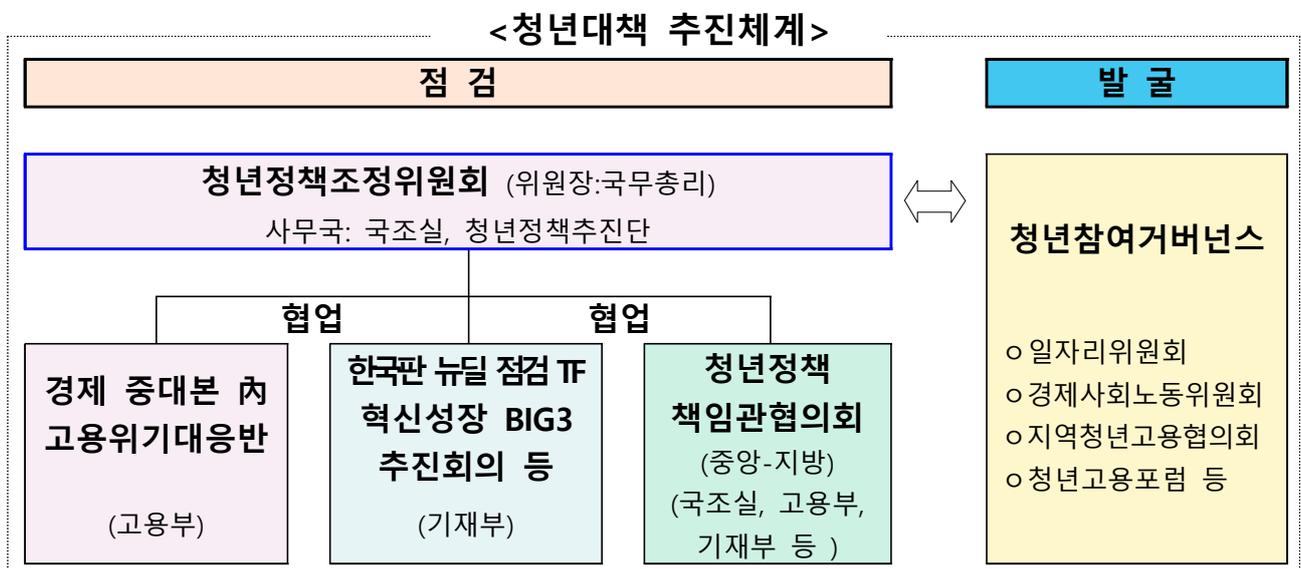
2 추가 정책과제 발굴

- 다양한 청년 참여 거버넌스*를 활용하여 청년층 일자리 문제 개선을 위한 추가 과제 발굴 추진

* 일자리위, 경사노위, 청년고용포럼(전문가) 지역청년고용협의회 등

- (중앙) 청년고용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청년고용포럼(월 1회)에 현장 전문가(청년단체 대표, 기업 대표자 등)를 포함하여 심도있는 논의 추진
- (지역) 지역내 청년 대상 서비스 전달 기관이 참여하는 「지역청년 고용협의회」*를 통해 지역단위 청년고용 관련 현장의 목소리 청취

* (예) 고용복지+센터, 대학일자리센터, 청년센터, 지자체 일자리센터 등



4 부처 협조사항

- 「고용위기 대응반」을 통해 부처별 시행계획 점검(4월)
 - 각 부처에서는 과제별 추진계획 제출(각 부처→ 고용부)
- 청년고용 상황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가급적 상반기내 조기집행이 가능하도록 집행관리에 철저

- 특히, 금번 추경을 통해 청년층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과제*들은 해당 사업에 청년이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운영 등 관리 강화

* (21.3.2. 추경 보도자료 참고) 청년층 일자리 14만개 창출 지원

◆ '21년 총 5.8조원 투입, 101.8만명+a* 청년 지원

* 인원(명) 기준 + 기업·지자체 지원 개소 등은 +a에 포함

[당초] 「청년정책 기본계획」 등 기존 정책(4.4조원, 79.4만명+a)을 통해 일자리 창출·청년 고용지원 지속 추진

[추가]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참여 확대 등 +1.4조원, +22.4만명+a

① 「청년정책 기본계획」 등 기존 추진 과제(주요 과제)

사업	'21년 지원 규모
청년 구직자 지원 (「청년정책 기본계획」 '20.12월)	55.5만명 국민취업지원제도(23만) 청년내일채움공제(10만) 청년추가고용장려금(9만) 청년디지털일자리(5만) 비대면디지털 공공일자리(37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26만) 공공기관 체험형 일자리(2.2만)
공무원 총원 + 공공기관 신규 채용	2.9만명 + 2.6만명(+@)
K-Digital Training	1.7만명
K-Digital Credit	4만명
내일배움카드(실업자, 34세 이하)	9만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2.9만명
청년고용 친화형 R&D 3종패키지	0.7만명
비대면 분야 창업 지원	900명
청년 스타트업 서비스 바우처지원	1.6만개소

* 「한국판 뉴딜」을 통해 '21~'22년까지 88.7만개 창출 추진

② 추가 지원 과제

사업	'21년 지원 규모
청년 디지털 일자리	+6만명(+5,611억원)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설	+2만명(+1,200억원)
K-Digital Training	+0.3만명(+474억원)
K-Digital Credit	+2만명(+100억원)
청년 도전지원사업	+0.5만명(+65억원)
국민취업지원제도	+5만명(+961억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0.9만명(+542억원)
비대면 분야 창업 지원	+0.12만명(+300억원)
디지털, 문화체육관광 전문인력 등 민간부문	+2.1만명(+2,303억원)
생활방역·안전 등 공공부문	+2.7만명(+2,008억원)
고졸 청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사업	+0.8만명(+200억원)